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086-01

정책보고서 2017-2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오윤섭·임완섭·이규환

【책임연구자】

오윤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보장평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사회보장 성과 인식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규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19
제1절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21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24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9
제3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33
제1절 평가결과 개요	35
제2절 평가결과 총평	36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분석	38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및 주요 성과	59
제4장 평가제도 개선방안	85
제1절 정부업무 평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의 과제	87
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88
참고문헌	118

표 목차

<표 1-1> 연구 관련 역할 분담	18
<표 2-1>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내용	23
<표 2-2>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	24
<표 2-3>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지표	26
<표 2-4>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 명단	27
<표 2-5> 조정된 평가대상 과제 수	28
<표 2-6> 평가대상 과제 수	29
<표 2-7> 자체평가 평가 등급	30
<표 2-8> 분야별 자체평가 평가 등급	30
<표 3-1> 2차 평가 결과 분석 중점사항	35
<표 3-2> 2016년도 평가대상 과제 현황	39
<표 3-3> 부처별 평가대상 과제 수	39
<표 3-4> 정책목표별 2016년 집행 예산 현황	40
<표 3-5> 정책목표별 2016년 예산 집행률	41
<표 3-6> 집행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예산 현황	42
<표 3-7> 평가결과 분야별 평가점수 요약	43
<표 3-8> 평가기준별 평가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43
<표 3-9>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44
<표 3-10> 평가결과 정책분야별 평가점수 요약	45
<표 3-11>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등급	47
<표 3-12>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상위 5개 과제	47
<표 3-13>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하위 5개 과제	48
<표 3-14> 예산·비예산 과제별 평가점수 요약	49
<표 3-15> 전년대비 평가점수 비교	49
<표 3-16> 전년대비 평가점수 비교(3개 평가지표 점수 환산)	50
<표 3-17> 전년대비 평가등급 비교	50
<표 3-18> 분야별 전년대비 평가점수 5점 이상 증가 과제 현황	51
<표 3-19> 분야별 전년대비 평가점수 5점 이상 감소 과제 현황	54
<표 3-20> 미흡 과제 현황	55
<표 3-21> 미흡 과제와 미흡평가 사유	56
<표 3-22> 전년 대비 10점 이상 감점 과제와 감점 사유	56
<표 3-23> 복수 부처의 추진 과제 현황	57
<표 3-24> 부처간 평가점수 편차가 큰 과제 현황 및 편차의 사유	59
<표 3-25>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59
<표 3-26>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평가결과	61
<표 3-2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결과	62
<표 3-2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평가결과	63

<표 3-2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결과	65
<표 3-30> 주거안정 대책 강화 평가결과	67
<표 3-3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평가결과	68
<표 3-32> 노후소득 보장 강화 평가결과	69
<표 3-33>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평가결과	70
<표 3-34>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평가결과	71
<표 3-3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평가결과	72
<표 3-36>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평가결과	73
<표 3-37>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평가결과	74
<표 3-3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평가결과	76
<표 3-39>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평가결과	77
<표 3-4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가결과	78
<표 3-41>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평가결과	80
<표 3-42>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평가결과	81
<표 3-4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결과	82
<표 3-44>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가결과	83
<표 4-1> 2차 평가와 자체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과제 수 및 비중 비교	97
<표 4-2> 2차 평가와 자체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과제 수 및 비중 비교(정책목표 기준)	97
<표 4-3> 사회보장 분야 평가제도 현황	101
<표 4-4> 법정평가 중복현황	103
<표 4-5> 2개 이상 타 기본계획 중복사업 현황	103
<표 4-6> 정책분야별 중복과제 현황	104
<표 4-7> 법정평가간 평가대상 중복 과제 현황	105
<표 4-8> 사회보장 분야 평가제도 현황	11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8
[그림 2-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체계	22
[그림 3-1]	연도별 평가결과 비교	36
[그림 3-2]	2016년도 지표별 배점별 달성도	37
[그림 3-3]	전년대비 지표별 평가점수 비교	37
[그림 3-4]	전년대비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비교	38
[그림 4-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틀	90
[그림 4-2]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체계	91
[그림 4-3]	시행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93
[그림 4-4]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1	100
[그림 4-5]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2	100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에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금까지 2014년도와 201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평가를 수행

□ 연구목적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

2. 주요 연구결과

가.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기본 방향

- (평가대상) 3개 정책목표별 총 202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5개 과제), 일을 통한 자립 지원(37개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개 과제)
-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0개)로 구성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매우 미흡(60점 미만)
- (평가기준)

<요약표 1>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점	
1.사업 개요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10)	10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10)	10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5)	5	
2.추진 과정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10	25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5)	5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10)	10	
3.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10)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5)	15	50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20)	20	
	목표달성도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15)	15	
소 계			100	

□ 과제 현황

○ 전체 16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는 89개(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뒤로 고용노동부 28개(13.9%), 교육부 24개(11.9%), 여성가족부 15개(7.4%)의 순으로 나타남

<요약표 2> 부처별 과제 현황

(단위: 개, %)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농식품부	국토부	문체부	행안부	기타 부처
과제수	89	28	24	15	13	8	8	4	13
비중(%)	44.1	13.9	11.9	7.4	6.4	4.0	4.0	2.0	6.4

주: 기타 부처 - 기재부(3개), 금융위(2개), 보훈처(2개), 환경부(2개), 국조실(1개), 산업부(1개), 여가부/법무부(1개), 중기부(1개)

○ 전체 202개 과제 중 예산 과제는 160개(79.2%), 비예산 과제는 42개(20.8%)로 예산 과제의 비중이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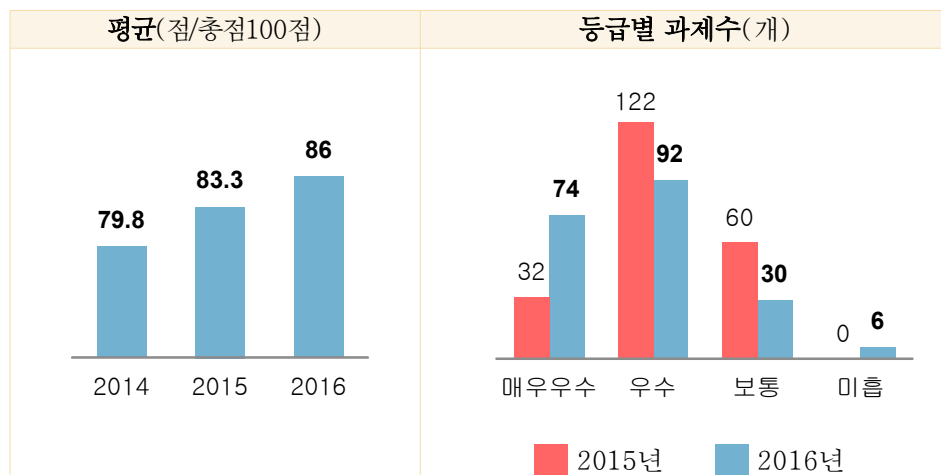
□ 평가 내용

○ 2016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86.0점(우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기본

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 2015년 추진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균은 2.7점('15년 평균 83.3점) 상승하였으며, 우수 이상의 과제도 전년대비 12개('15년 154개→'16년 166개) 증가
- '14년 추진실적 평가 이후 전체 평균 점수는 매년 2점 이상 상승 추세

[요약그림 1] 연도별 평가결과 비교



나. 평가결과 주요 내용

□ 정책목표별 분석

○ 정책목표별 평균 점수는 모두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87.2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86.0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85.6점)의 순으로 평가됨

<요약표 3>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단위: 억 원, 점)

정책목표	'16예산 (억 원)	평균 점수	평가 등급
전체	716,909	86.0	우수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671,472	85.6	우수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48개)	131,490	85.9	우수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2개)	346,303	86.8	우수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21개)	125,391	84.2	우수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44개)	68,288	85.2	우수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16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목표	'16예산 (억원)	평균 점수	평가 등급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7개)	38,574	87.2	우수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11개)	7,318	91.2	매우우수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9개)	8,494	81.7	우수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6개)	8,862	85.3	우수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11개)	13,900	88.8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20개)	6,863	86.0	우수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5개)	367	86.5	우수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15개)	6,496	85.8	우수

- 세부과제의 평가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총 202개 세부과제 중 ‘매우우수’ 74개(36.6%), ‘우수’ 92개(45.5%), ‘보통’ 30개(14.9%), ‘미흡’ 6개(3.0%)로 평가
- 미흡 과제는 총 6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일부 과제가 미흡한 성적을 보임

<요약표 4>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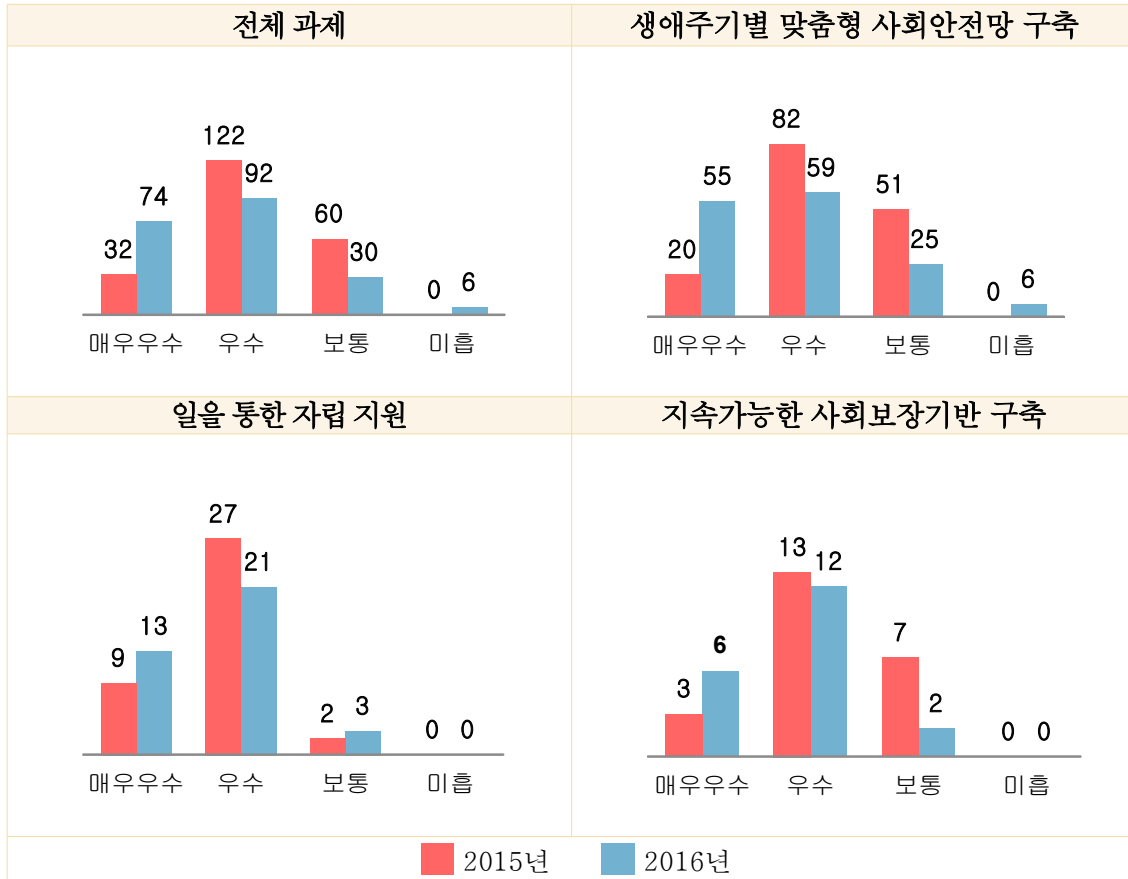
(단위: 개, %)

평가등급	합 계 (202)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5)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7)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
매우우수	74 (36.6%)	55 (37.9%)	13 (35.1%)	6 (30.0%)
우수	92 (45.5%)	59 (40.7%)	21 (56.8%)	12 (60.0%)
보통	30 (14.9%)	25 (17.2%)	3 (8.1%)	2 (10.0%)
미흡	6 (3.0%)	6 (4.1%)	-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정책목표에서 평가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 매우우수 과제는 전년대비 42개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매우우수 과제가 전년대비 35개 증가

[요약그림 2] 전년대비 평가등급 비교



○ 2016년 전체 집행예산은 총 69조 6,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2016년 예산 집행률은 97.2%로 집계

－ 정책목표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집행예산이 65조 3,99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 규모를 나타냈으며, 지출증감률은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11.4%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요약표 5> 정책목표별 2015~2016년 집행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정책목표	'15 결산 (A)	'16 예산	'16 결산 (B)	'16 집행률	지출 증감률(B-A)
전 체	678,267	716,909	696,942	97.2	2.8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38,950	671,472	653,992	97.4	2.4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2,493	38,574	36,207	93.9	11.4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6,824	6,863	6,743	98.3	△1.2

- 주택 마련자금 지원, 연금 및 급여 지급, 대학교육비 지원 등 집행예산 규모 상위 10개 과제가 전체 집행예산 중 81% 이상을 차지함

<요약표 6> 집행예산 상위 10개 과제 현황

(단위: 억 원, %, 점)

과제명	부처	'16 결산 (억원)	전체 규모 대비 비중	'16 평가점수
2-2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13,216	16.2	91.0
3-1.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99,119	14.2	91.6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79,883	11.5	90.0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63,895	9.2	78.0
2-31~33.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58,074	8.3	94.9
1-11-1.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	47,205	6.8	88.0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	40,382	5.8	92.0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35,642	5.1	72.0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7,696	2.5	88.0
2-25.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9,537	1.4	96.3

□ 평가항목별 분석

-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의 배점별 달성도¹⁾를 보면 사업개요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달성도(85.0%), 추진과정(84.0%) 순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내용과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개요가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어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
 - 추진과정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으로 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볼 때, '2-3. 예산집행실적'(96.0%)이 가장 높은 달성도를,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2.0%)이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임
 - 높은 달성률을 보인 평가항목은 '2-3. 예산집행실적'(96.0%), '3-3. 목표달성도(95.3%)',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4.0%) 순임
 - 낮은 달성률을 보인 평가항목은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2.0%), '2-1. 추진일정의 적

1) 배점별 달성도: 평가항목 평균 점수 / 평가항목 만점 점수

절성'(78.0%), '3-1. 성과지표의 적절성'(78.7%) 순임

<요약표 7>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단위: 점, %)

평가항목	만점 점수	평균 점수	달성도 (%)
1. 사업개요	25	22.8	91.2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10	9.4	94.0
1-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9.1	91.0
1-3.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5	4.3	86.0
2. 추진과정	25	21.0	84.0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7.8	78.0
2-2. 사업관리의 적정성	5	3.6	72.0
2-3. 예산집행 실적	10	9.6	96.0
3. 성과달성도	50	42.5	85.0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11.8	78.7
3-2.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20	16.4	82.0
3-3. 목표달성도	15	14.3	95.3

다. 평가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보장평가의 주요 과제

- 정부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임
 - 제도개선의 주요 이슈는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체평가 기능 강화, 평가의 사업관리 및 정책효과 제고, 성과정보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임
 -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제도도 그 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시행계획 실적평가의 체계화, 자체평가 내실화,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 차원에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2)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화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과제관리의 보완 필요성 제기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의 상당 수가 시행계획 수립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
- 평가대상 과제 중 일부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새로이 추가되는 등 평가대상 과제의 관리에 허점이 존재

□ 시행계획 수립 합리화 방안

- 기본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과제의 중기 로드맵에 기초하여 시행계획 수립
 - 1차 연도 시행계획에는 각 과제별 5년간 로드맵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제시하게 하고, 2차 연도부터는 각 연도 시행계획만을 제출
- 단년도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합리화로 시행계획을 내실화
 - 정책목표와 세부정책분야의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점검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관리 설계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제출
 - 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모습'은 향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가능하면 정책 목표별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의 구체화
 - 변경사유와 변경 시 처리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매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시 관련 사항을 같이 전달

3) 시행계획 실적평가 개선방안

□ 양질의 평가자료 확보는 시행계획 실적 점검의 기초

- 실적 평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내용의 불충분', '표기 오류',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평가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상존함
- 중기적 실적관리를 위해 정책목표별, 세부정책 분야별로 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필요
 - 평가 세부지침 활용을 통해 어떤 자료를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자체 평가자료 준비에 도움이 됨
 - 다만, 상위목표(정책목표 및 세부정책분야)별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한 관련 자료는 평가

계획 공지 시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적합하도록 평가항목과 기준(초점)을 재조정

- 현재 측정기준에서 '1-1.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은 <기본계획-중기계획-연차별 계획>과 당해 연도 사업내용의 적합성을 보는 내용으로 변경
-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2-2. 사업관리의 적정성', '2-3. 예산집행 실적' 등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측정기준은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존의 가용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성과와 관련한 점검에서는 성과지표 설정과 산정 부분의 보완 필요
 - 성과지표는 매년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목표치의 산정 및 산식과 관련해서는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점검 필요

□ 과제별 평가 이외에 정책목표별 단기 실적 관리 필요

- 복수 부처 추진과제 관리 방안 마련
 - 복수부처가 관여하는 과제들의 종합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당시부터 종합 평가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두어 평가
-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상위목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위목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준비

4)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공개범위, 결과의 환류 과정 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평가보고서 내용구성, 평가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구체화
 - 2016년도 실적평가 개요, 평가결과 종합, 시행계획 주요 실적, 세부 과제별 평가 결과로 구성
- 평가결과 공개(내용범위와 시기, 방법 등)는 단기, 장기로 나누어 실시
 - 평가제도 운영 초기 대외공개는 '요약본'의 형태가 바람직

- 제도정착 후 정보 수요자별로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방법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공개

5)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 자체평가 강화를 통한 시행계획 평가 내실화

- 현재 공공부문의 평가는 소관부서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며, 시행계획 자체평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평가기준 적용의 오류, 평가자료의 미흡,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강하여, 자체평가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

□ 과제 소관부서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능력 평가 및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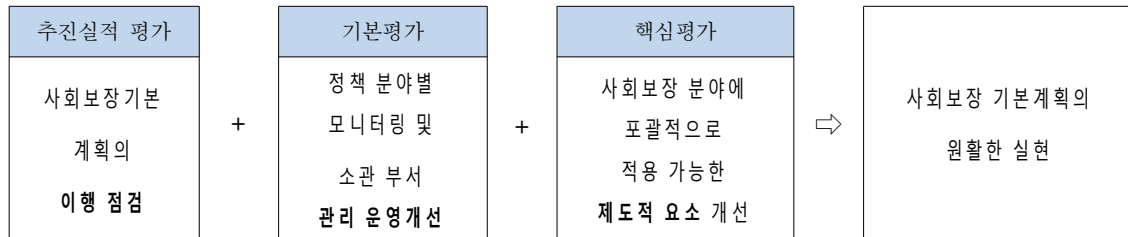
- 명확한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과제별 소관부서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자체평가보고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 평가에 반영
- 자체평가는 소관 과제 '추진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자체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평가부문' 2-2(사업관리의 적정성, 현재 5점 배점)에 가감점 부여
- 각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 앞서 소관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6) 평가제도간 연계 및 조율강화 - 사회보장위원회 내 평가제도간 연계

□ 추진실적 평가, 기본평가, 핵심평가 등 각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평가제도를 내실화

- (추진실적 시행계획 평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에 상응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실행여부와 그 성과 점검이 그 목적(앞에서 언급)
- (기본평가) 사회보장 정책 분야별 모니터링의 성격을 강화하되, 직접 사업 및 제도의 평가보다는 (i) 정책분야별 대표지표 선정을 통한 평가 (ii) 메타분석과 전문가 의견(FGI)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부처의 조치상태 및 향후 조치계획 답변
- (핵심평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기본평가 결과 종합, 또는 현안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되, 사업 또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가급적 지양

[요약그림 3]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 중기적으로는 시행계획 실적평가와 기본평가의 통합 운영 방안 고려

- 시행 계획 실적평가는 현행의 개별과제 중심의 평가에서 정책 사업군 또는 다부처 사업군을 대상으로 그 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현행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평가과)은 상위 목표와 사업군의 성과지표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
- 사회보장 정책영역과 목표를 망라하는 성과지표 지도(Performance Indicator Map)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업군 단위의 기본평가를 대체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성과지표 지도는 성과목표 체계를 기초로 한 성과지표와 더불어 사업군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 생애주기별, 또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고용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등)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을 파악 점검함

7) 평가제도간 연계 및 조율강화 - 타 법정평가와의 연계 방안

□ 타 법정평가 현황

- 현재 사회보장 분야는 총 7개의 기본계획에 따라 6개의 성과평가제도가 법정평가로 운영 중임
 - － 이외에,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와도 사업이나 과제 단위에서 중복
 - － 특히,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소관부서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동시에 평가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됨
 - － 각각의 평가제도별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배점 등)이 미미하게 다른 가운데, 동일 사업에 대해 상이한 평가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위험도 존재

□ 법정 평가제도 간 중복 해소 가능성과 방안

- 각 위원회가 실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용하는 초점이 달라 평가제도 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현재 각 평가제도가 상이한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적용하고 있어, 타 법정평가 결과를 시행계획 실적평가에 활용하기도 곤란한 실정
- 각 연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시 타 법정평가에서의 평가대상 여부를 과제별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차원에서 관리과제의 중복현황을 파악하여 추후에 정책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복평가의 해소방안은 각 개별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법정평가 간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추진
 - － 단기적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현행대로 사업평가를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각 평가제도의 운영 추이(평가 운영 횟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황 파악 필요
 - － 정부업무 평가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정책 운영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주요 정책 영역별(사회보장, R&D, 저출산·고령화)로 법정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제도의 표준화, 평가제도간 조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시행을 계기로 각 부처에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금까지 2014년도와 201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수행
 - 201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는 중간점검의 성격을 가지는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졌고, 정책대상 및 내용별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였음
 - 정책 대상별 점검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당시 목표로 설정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모습'의 25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 정책내용별 점검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1개 세부분야별로 정책성과를 직접·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세부분야별로 1~3개의 지표를 발굴하고 총 81개 지표로 중간 점검이 이루어짐
 - 현재 각 부처의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이 종결되었으므로 실적 점검을 통해 계획의 이행도와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추진과 관련한 운영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난 2년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한 추진실적 평가제도의 운영에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됨
 - 그동안 시행계획 실적평가 과정에서 성과평가제도의 불완전성,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수립과 평가시기의 부조화,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미흡, 평가의 질 관리 등 제도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고,
 - 또한,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 외에 개별법에 따른 다수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

어, 타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여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평가제도 운영 3년에 즈음하여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관련한 법정 평가의무를 수행 하면서, 동시에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진행 경과를 점검 함으로써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유도하고,
- 동시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2016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성
-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20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기존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 등 총 187개이며, 실제 평가대상과제는 202개 임
- 평가는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 등 3개의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하였고, 이때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는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과제별로 (i) 평가결과

(ii)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의 형태로 제시함

- 그리고, 3개 정책 분야(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별로 성과우수 사례를 발굴

□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행계획 평가제도 개선방안은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하여 도출하였음

- 기 시행된 추진실적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부합한 실적 평가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실적 평가의 방향 및 핵심 초점을 발굴
- 사회보장 기본평가, 핵심평가와의 관계 설정
-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개별법에 근거한 추진실적 평가제도 등 타 평가제도와와의 연계를 통한 실적 평가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

□ ‘2016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실적평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을 수립하기 이전에 수행하는 마지막 실적평가이므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원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발굴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수행자로서, 평가 주무부서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평가과의 협력 하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직접 수행함

○ 자료 분석 및 검토

- 세부과제별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 사회보장시행계획, 그리고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추진실적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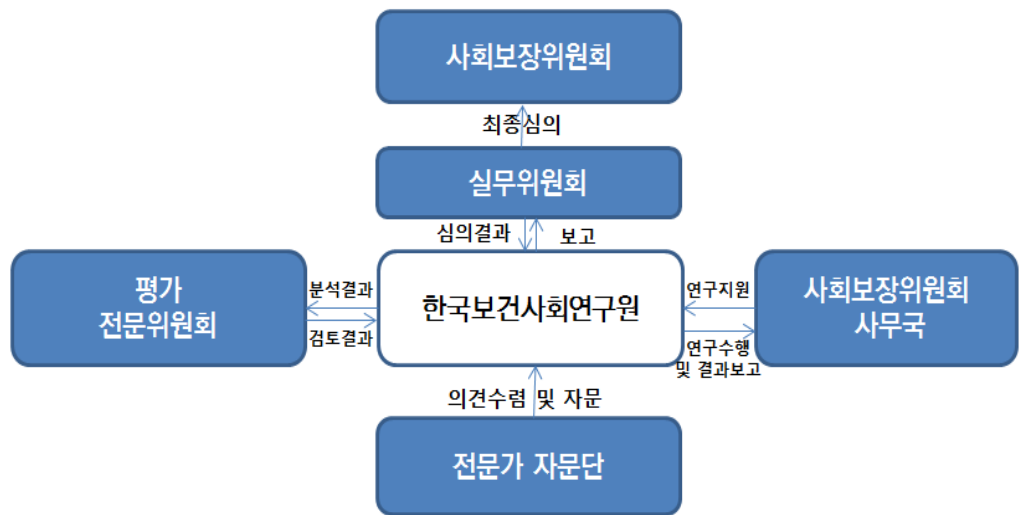
○ 평가과정에서 정책분야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

- 저출산, 아동, 청소년, 고령화, 의료보건, 장애인 등 정책분야에 따라 14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

<표 1-1> 연구 관련 역할 분담

구분	기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평가과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시행과 평가 및 효과분석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수행
평가 전문위원회	평가 관련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분석과 조사를 실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시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 2 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제1절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2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 추진실적 평가 개요 <

제1절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 사회보장 시행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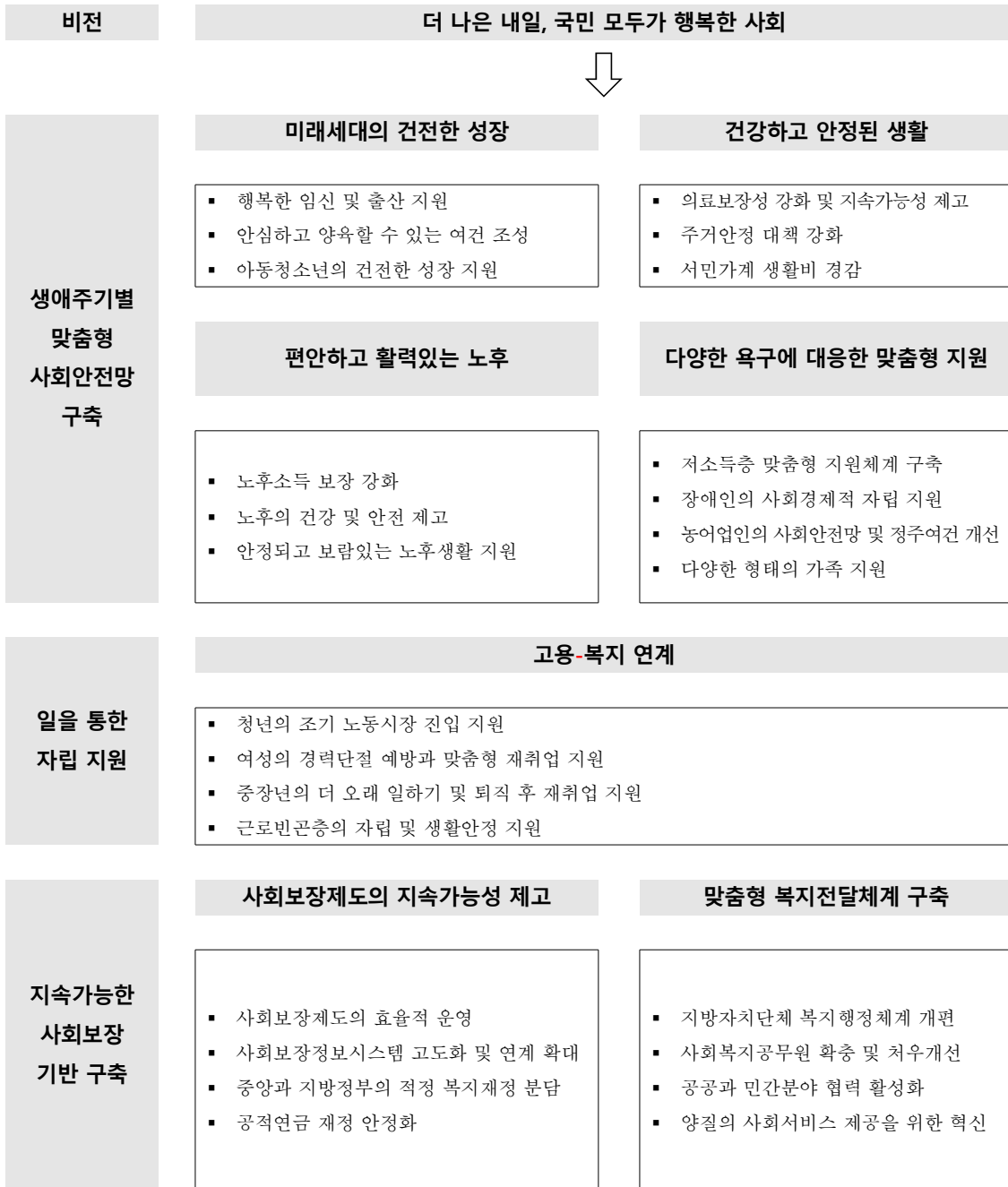
□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 분야 정책목표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등 3개의 분야로 나누고 각 목표별로 정책분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요시책 시행계획을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하여 확정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금까지 2014년 시행계획('14.9월), 2015년 시행계획('15.8월), 2016년 시행계획('16.5월), 2017년 시행계획('17.4월)이 확정되어 4차례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됨

[그림 2-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체계



자료: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 2016년 시행계획 개관

□ 2016년 시행계획은 총 1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62조 1,871억 원 규모임

○ 2014년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총 211개 과제였으나, 그 동안 일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6년에는 187개 과제가 추진 중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로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음
-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예산은 62조 1,871억 원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53조 6,516억 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7조 8,203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7,152억 원이 배정
- 부처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 92개 과제로 압도적으로 많고, 고용부 28개, 교육부 23개, 여가부 16개, 농식품부 13개, 국토부 8개, 행안부 4개, 기재부 3개 등으로 총 20개 부처에서 각 과제를 추진 중
- 2016년도 시행계획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시행계획과 다른 점을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개의 정책내용이 2016년도 시행계획에 새로이 포함되어 추진 중(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9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7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4개)

<표 2-1>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내용

구분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 확대 배치 및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확대 ■ 빅데이터 활용 학대위험아동 발굴 모형 개발, 학대신고 체계 강화 ■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지속 추진 ■ 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 ■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16.1~)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70세 이상→65세 이상, '16.7~)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운영 및 가정·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 보장 및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일을 통한 자립 지원(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8개교 내외)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통상임금의 100%, 1→3개월)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60세 정년 의무화 적용('16.1~) ■ 특수형태업무종사자(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적용('16.7~) ■ 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0곳(누적 70곳) 확충 ■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자격 완화('15년 60세→'16년 50세) ■ 자활사업 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 시 정부지원금 신규 지원

구분	내용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업무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16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자료: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6년도 시행계획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1. 평가 추진개요

-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에 따른 법정 평가임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부서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의 향상과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후의 시행계획에 반영함
-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6년도 시행계획 상의 187개 과제를 대상으로 '17년 4월~9월 기간 동안 수행

<표 2-2>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

구분	내용
평가 기간	■ 2017.4월~9월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도 시행계획(187개 과제) 추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
평가범위	■ '16년도 시행계획의 각 사회보장사업의 목적·내용, 추진체계·과정, 목표달성도·정책 효과성 등

2. 평가 기본방향과 프레임 워크

가. 기본 방향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세부과제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관계부처 스스로 평가(자체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강화
-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정책개선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결과가 효과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나. 평가절차

□ 평가는 관계부처의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별 자체 1차 평가와 전문기관의 2차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1차 평가) 관계부처 사업 소관부서에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하고,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평가과)에 제출
- (2차 평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
 - － 전문성을 갖춘 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단)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각 정책분야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
 - －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 사례 선정 및 개선방안 도출
- (심의·확정)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다. 평가기준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사업 개요, 추진과정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함

○ 평가지표는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0개)로 구성

<표 2-3>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평가지표

(단위: 점)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항목별 배점)	배 점	
1. 사업 개요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10)	10	25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구체성(10)	10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세부 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5)	5	
2. 추진 과정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10	25
	사업관리의 적정성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5)	5	
	예산집행 실적	－ 계획대로 예산집행 여부(10)	10	
3.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10)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5)	15	50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20)	20	
	목표달성도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15)	15	
소 계			100	

자료: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통한 계량적 분석, 5등급으로 평가

-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10개)로 구성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 매우 미흡(60점 미만)
- 비예산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실적을 제외하고 평가(90점 만점)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부록 1> 참조

라. 평가위원

□ 각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1~4명의 평가위원이 배정됨

○ 평가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평가위원별로 평균 14.4개의 과제를 평가함

<표 2-4>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위원 명단

정책목표	정책 분야	평가위원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이소영 연구위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은정 부연구위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강지원 전문연구원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오윤섭 연구위원, 박은자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김문길 부연구위원, 임완섭 부연구위원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김태완 연구위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황남희 부연구위원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오윤섭 연구위원, 박은자 연구위원, 서제희 부연구위원, 임완섭 부연구위원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임완섭 부연구위원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황주희 부연구위원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김태완 연구위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김태완 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강지원 전문연구원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김문길 부연구위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김현경 부연구위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임완섭 부연구위원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오윤섭 연구위원, 함영진 연구위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함영진 연구위원

주: 평가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임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대외 공표를 통해 사업 계획수립·이행에 대한 관계부처 책임성 강화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각 부처 사업 효율성 강화 도모

○ 관계부처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반영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의 최종 평가 시행 후, 연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 수립 시 반영

4. 평가대상 과제의 구조

- 당초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수는 187개이었으나, 부처의 자체평가 취합결과 총 202개의 과제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됨
- 2016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상의 총 과제 수는 187개(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구축 19개)
- 당초 총 187개의 과제 중 22개의 과제가 관계부처 자체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발생
-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체평가 단계에서 5개의 과제가 제외됨
 - (2-29)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복지부), (4-4)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강화(복지부), (4-29) 공용이용시설 조성 확대(농식품부), (5-18)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아카데미(고용부), (6-3) 현행 복지사업 연계 조정방안 마련(복지부)

<표 2-5> 조정된 평가대상 과제 수

구분	변동 사항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에는 존재하나 평가에서 삭제된 과제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9.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 4-4. [복지부]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4-29. [농식품부] 공용이용시설 조성 확대 ○ 부처별 복수사업 추진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1. [복지부]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예산), 1-11-2. [교육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예산) ▪ 1-14-1.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비예산), 1-14-2.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예산) ▪ 1-21-1. [국조실] 유보통합 추진(비예산), 1-21-2.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비예산) ▪ 1-29-1. [복지부]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예산), 1-29-2. [교육부]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예산), 1-29-3. [여가부]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예산) ▪ 1-31-1. [교육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예산), 1-31-2. [복지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예산) ▪ 2-29-1. [국토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예산), 2-29-2. [교육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예산) ▪ 4-3-1. [복지부]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비예산), 4-3-2. [복지부]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예산) ▪ 4-26-1. [농식품부]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비예산), 4-26-2. [교육부]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예산) ▪ 4-30-1.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양육지원(예산), 4-30-2. [농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촌 정착 지원(예산) ▪ 4-34-1.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예산),

	4-34-2. [교육부]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자녀 교육지원 확대(예산), ▪ 4-35-1. [여가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예산), 4-35-2. [교육부]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예산) ▪ 4-38-1. [국토부] 주거 생활 안정 지원(예산), 4-38-2. [여가부] 한부모가족 주거생활안정지원(예산)
일을 통한 자립지원 (4개)	○ 시행계획에는 존재하나 평가에서 삭제된 과제 (1개) ▪ 5-18. [고용부]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아카데미 ○ 부처별 복수사업 추진 (3개) ▪ 5-11-1.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예산), 5-11-2.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예산) ▪ 5-26-1.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예산), 5-26-2. [고용부] 산업현장교수단(예산) ▪ 5-34-1. [고용부]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예산), 5-34-2. [복지부]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복지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3개)	○ 시행계획에는 존재하나 평가에서 삭제된 과제 (1개) ▪ 6-3. [복지부] 현행 복지사업 연계 조정방안 마련 ○ 부처별 복수사업 추진 (2개) ▪ 6-16-1. [행안부] 복지인력 확충 추진(비예산), 6-16-2. [복지부] 복지인력 확충 추진(예산) ▪ 6-17-1. [행안부] 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비예산), 6-17-2. [복지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예산)
총 개수	22개

○ 관계부처별 자체평가한 후 제출된 과제 수는 총 202개 과제(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7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개)

<표 2-6> 평가대상 과제 수

(단위: 개)

구분	'16년도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 수	제출된 평가과제 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	145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5	37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	20
계	187	202

제3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요약

□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96.8점으로 대다수의 사업부서가 2016년 추진실적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자체 평가함

○ 평가 등급이 '매우 우수'에 속하는 과제는 전체 202개 과제 중 183개로서 전체 평가 대상

과제에서 90.6%를 차지하며, 100점 만점인 과제의 수도 79개로서 전체 과제 중 39.1%를 차지함

- 보통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는 3개이며, 이들 과제의 수는 전체 과제에서 1.5%를 차지함
 - －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과제는 없으며, 자체평가 최저점은 75점으로 기록됨

<표 2-7> 자체평가 평가 등급

(단위: 개, %)

등급	점수 구간	과제수	비중	누적 비중
매우 우수	100점	79	39.1	39.1
	91 ~ 99.9점	104	51.5	90.6
우수	81 ~ 90점	16	7.9	98.5
보통	71 ~ 80점	3	1.5	100.0
미흡	61 ~ 70점	0	0.0	100.0

□ 정책목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3개 정책목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인 과제의 수는 총 과제 수의 89~91% 수준, 우수 등급인 과제의 수는 5~10.8% 수준

<표 2-8> 분야별 자체평가 평가 등급

(단위: 개, %)

정책목표	등급	점수 구간	과제수	비중	누적 비중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매우 우수	100점	57	39.3	39.3
		91 ~ 99.9점	75	51.7	91.0
	우수	81 ~ 90점	11	7.6	98.6
	보통	71 ~ 80점	2	1.4	100.0
	미흡	61 ~ 70점	—	—	100.0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7개)	매우 우수	100점	12	32.4	32.4
		91 ~ 99.9점	21	56.8	89.2
	우수	81 ~ 90점	4	10.8	100.0
	보통	71 ~ 80점	—	—	100.0
	미흡	61 ~ 70점	—	—	100.0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매우 우수	100점	10	50.0	50.0

정책목표	등급	점수 구간	과제수	비중	누적 비중
(20개)		91 ~ 99.9점	8	40.0	90.0
	우수	81 ~ 90점	1	5.0	95.0
	보통	71 ~ 80점	1	5.0	100.0
	미흡	61 ~ 70점	—	—	100.0

제 3 장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1절 평가결과 개요

제2절 평가결과 총평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분석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및 주요 성과

제1절 평가결과 개요

-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전문기관 2차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1차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종합에서 비교하여 제시하였음
- 전문기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2차 평가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 각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실제로 이행된 정도와 그 성과를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고, 동시에 자체 평가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을 간접적으로 평가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소관 부서가 정책과 업무를 스스로 점검,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종합, 정책목표별(분야별) 평가결과,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표 3-1> 2차 평가 결과 분석 중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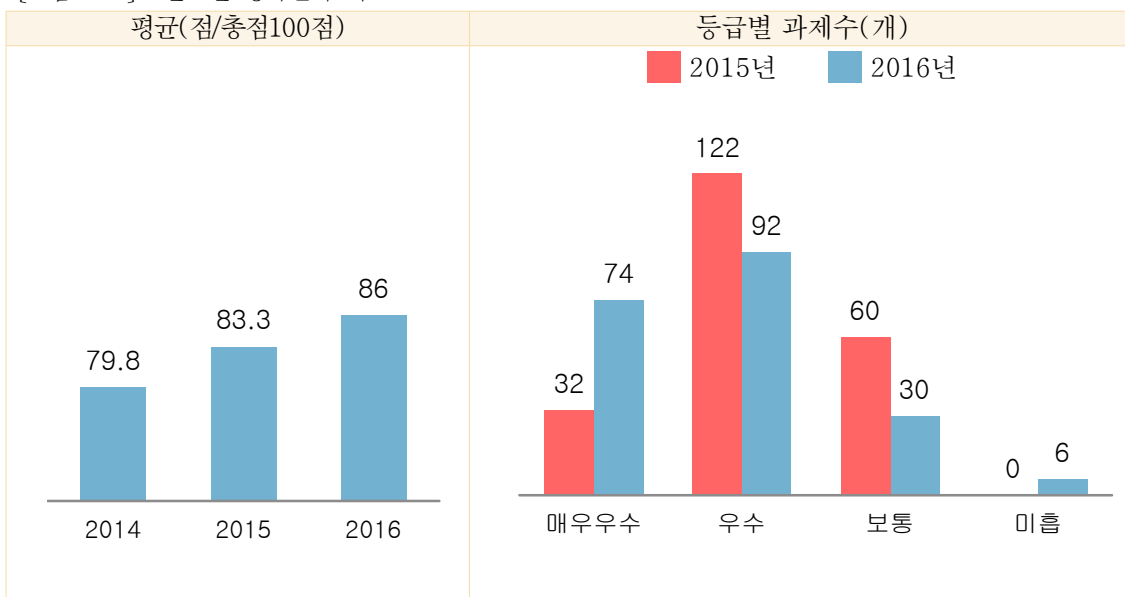
구분	분석 내용
평가결과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평균 점수, 평가등급별 과제 수 분포 ○ 평가부문별,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대상 과제 및 수행부처 현황 ○ '16년 평가대상 과제 예산현황 ○ 2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평균, 정책목표별, 평가부문별 평가점수 현황 ○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별, 세부과제별, 예산·비예산 사업별 평가결과 － '15년과 '16년 시행계획 실적 평가결과 비교 － 평가부진 과제의 평가결과 세부분석 ○ '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정책목표 및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평가결과, 종합의견, 개선방안

제2절 평가결과 총평

1. 최종평가 평균 점수

-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평가 평균점수는 86점(우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보장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2015년 추진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균은 2.7점('15년 평균 83.3점) 상승하였으며, 우수 이상의 과제도 전년대비 12개('15년 154개→ '16년 166개) 증가하였음
 - － 최초 시행계획 추진실적이 평가된 '1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평균 점수는 매년 2점 이상 상승 추세임

[그림 3-1] 연도별 평가결과 비교



2.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부문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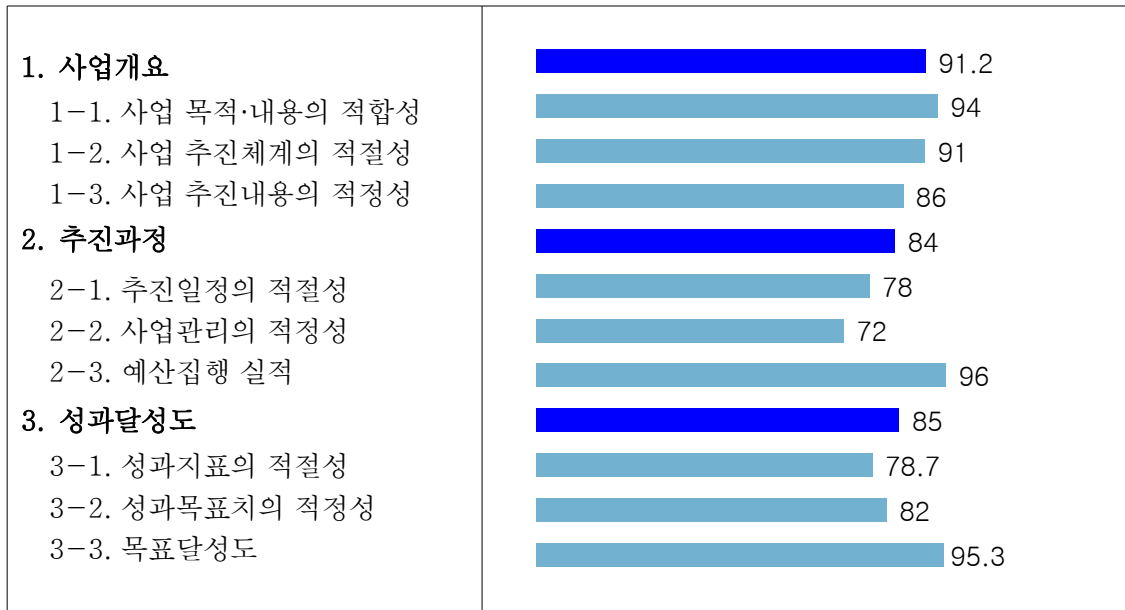
- 시행계획평가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로 볼 때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설계하여 추진 중이며, 다만, 성과관리에 필요한 추진과정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의 배점별 달성도²⁾는 사업개요 91.2%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달성도(85.0%), 추진과정(84.0%) 순으로 나타남
 - － 특히, '추진과정' 부문에서 '사업관리의 적정성'의 경우 72.0%, '추진일정의 적절성'의

2) 배점별 달성도: 평가항목 평균 점수 / 평가항목 만점 점수

경우 78.0%, ‘성과달성도’ 부문에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78.7%로 낮은 달성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임

[그림 3-2] 2016년도 지표별 배점별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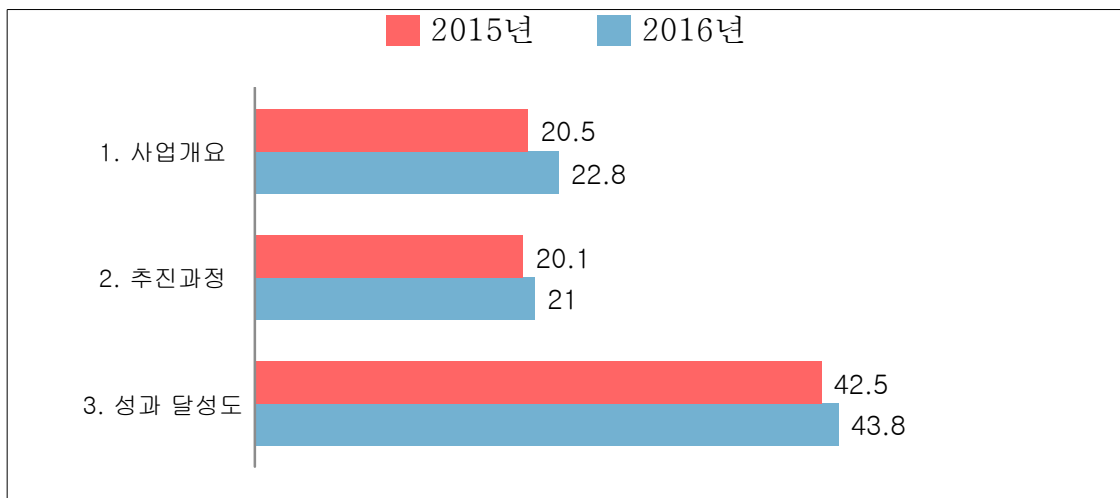
(단위: 점)



○ 평가부문별 평가점수는 전 부문에서 향상되었으며, 사업개요와 성과달성도가 개선을 보였고 추진과정은 미미한 개선을 보임

[그림 3-3] 전년대비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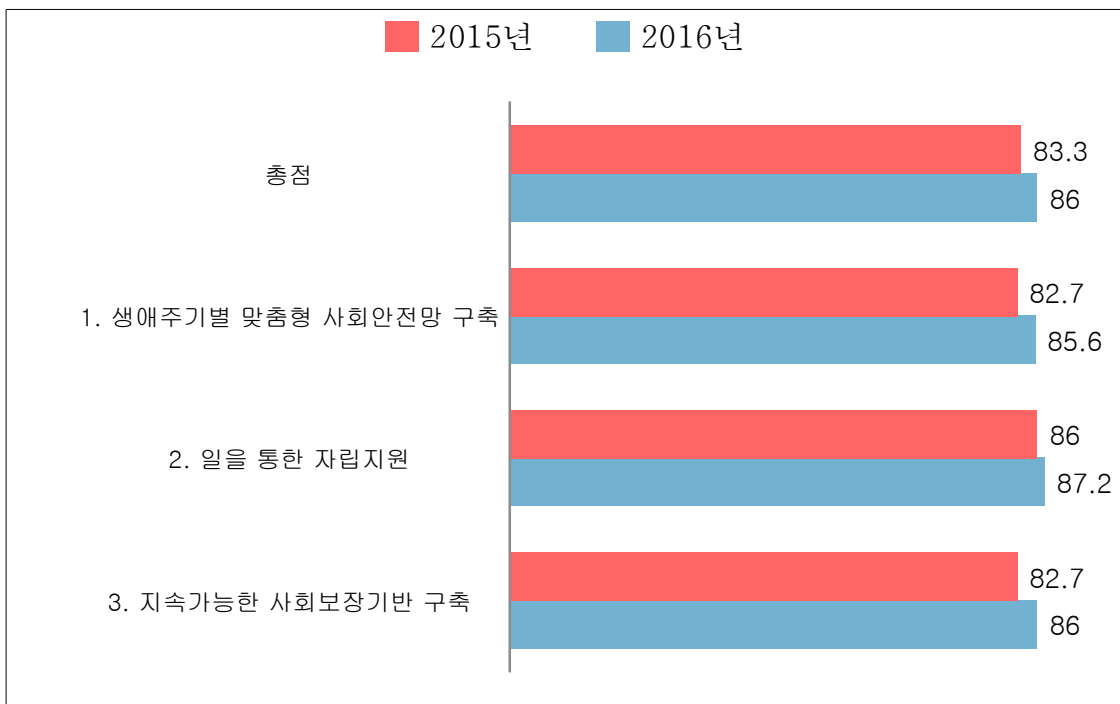
주: '16년 성과달성도 점수는 '15년 배점 기준으로 산출했을 경우의 점수로서, '16년 배점 기준으로 산출했을 경우는 42.5점임

3.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 3개의 정책목표별 평균 점수는 모두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고른 평균점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19개 세부 정책분야가 큰 차이 없이 고르게 평가되었으며, 모든 정책 분야가 '우수' 이상으로 평가됨

[그림 3-4] 전년대비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비교

(단위: 점)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분석

1. 평가 대상 과제 및 수행부처 현황

- 2016년 추진실적 평가 대상 과제는 202개이었으며, 약 79.2%(160개)는 예산사업으로 추진됨

- 정책목표별로 과제 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145개로 전체 비중의 71.8%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은 37개(18.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은 20개(9.9%)임

- 전체 202개 평가 과제 중 예산 과제의 수는 160개(79.2%)이었고, 비예산 과제의 수는 42개

(20.8%)로, 예산 과제의 수가 약 79%의 비중을 차지함

<표 3-2> 2016년도 평가대상 과제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분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합계	202	145 (71.8)	37 (18.3)	20 (9.9)
예산	160 (79.2)	120 (82.8)	27 (73.0)	13 (65.0)
비예산	42 (20.8)	25 (17.2)	10 (27.0)	7 (35.0)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평가과제에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등 총 16개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복지부 과제 수는 89개(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3> 부처별 평가대상 과제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분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		%		%
합계	202	100.0	145	100.0	37	100.0	20	100.0
복지부	89	44.1	69	47.6	5	13.5	15	75.0
고용부	28	13.9	5	3.4	22	59.5	1	5.0
교육부	24	11.9	20	13.8	4	10.8	—	—
여가부	15	7.4	13	9.0	2	5.4	—	—
농식품부	13	6.4	12	8.3	—	0.0	1	5.0
국토부	8	4.0	8	5.5	—	0.0	—	—
문체부	8	4.0	8	5.5	—	0.0	—	—
행안부	4	2.0	1	0.7	1	2.7	2	10.0
기재부	3	1.5	1	0.7	1	2.7	1	5.0
금융위	2	1.0	2	1.4	—	—	—	—
보훈처	2	1.0	1	0.7	1	2.7	—	—
환경부	2	1.0	2	1.4	—	—	—	—
국조실	1	0.5	1	0.7	—	—	—	—
산업부	1	0.5	1	0.7	—	—	—	—
중기부	1	0.5	—	—	1	2.7	—	—
여가부/ 법무부	1	0.5	1	0.7	—	—	—	—

주: 각 부처의 비중(%)은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비중의 합산은 100%와 다를 수 있음

2. 2016년 평가과제 예산 현황

□ 2016년 평가 과제의 총 집행예산 규모는 69조 6,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1조 8,675억 원) 증가

- 정책목표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집행예산이 65조 3,992억 원으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고, 일을 통한 자립지원은 3조 6,207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은 6,743억 원이었음
- 전년대비 지출증감률은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11.4%(3,714억 원)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2.4%(1조 5,042억 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은 △1.2%(△81억 원)를 기록함

<표 3-4> 정책목표별 2016년 집행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정책목표	'15년 결산			'16년 결산			전년대비 증감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증감액	%
전 체	678,267	553,347	124,920	696,942	568,807	128,135	18,675	2.8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38,950	516,517	122,433	653,992	528,445	125,547	15,042	2.4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126,970	54,404	72,566	131,099	56,471	74,628	4,129	3.3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30,138	313,082	17,056	336,087	318,414	17,673	5,949	1.8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117,762	90,031	27,731	121,017	92,915	28,102	3,255	2.8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64,080	59,000	5,080	65,789	60,645	5,144	1,709	2.7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2,493	32,132	361	36,207	35,690	517	3,714	11.4
-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6,006	5,948	58	6,983	6,780	203	977	16.3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7,638	7,468	170	7,823	7,643	180	185	2.4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8,379	8,379	-	8,358	8,358	-	△21	△0.3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10,470	10,337	133	13,043	12,909	134	2,573	24.6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6,824	4,698	2,126	6,743	4,672	2,071	△81	△1.2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20	220	-	283	283	-	63	28.6
- 맞춤형복지전달 체계구축	6,604	4,478	2,126	6,460	4,389	2,071	△144	△2.2

□ 2016년 평가 과제의 총 집행률은 97.2%로 나타났으며, 세 개의 정책목표 모두 93%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

○ 국비와 지방비로 구분하여 집행률을 집계했을 때, 국비와 지방비 모두 집행률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정책목표별 2016년 예산 집행률

(단위: 억 원, %)

정책목표	'16년 합계			'16년 국비			'16년 지방비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전 체	716,909	696,942	97.2	587,579	568,807	96.8	129,330	128,135	99.1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71,472	653,992	97.4	544,792	528,445	97.0	126,680	125,547	99.1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131,490	131,099	99.7	56,790	56,471	99.4	74,700	74,628	99.9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46,303	336,087	97.0	328,617	318,414	96.9	17,686	17,673	99.9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125,391	121,017	96.5	96,427	92,915	96.4	28,964	28,102	97.0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68,288	65,789	96.3	62,958	60,645	96.3	5,330	5,144	96.5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8,574	36,207	93.9	37,996	35,690	93.9	578	517	89.4
－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7,319	6,983	95.4	7,116	6,780	95.3	203	203	100.0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8,494	7,823	92.1	8,313	7,643	91.9	181	180	99.4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8,862	8,358	94.3	8,862	8,358	94.3	—	—	—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13,899	13,043	93.8	13,705	12,909	94.2	194	134	69.1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6,863	6,743	98.3	4,791	4,672	97.5	2,072	2,071	100.0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367	283	77.1	367	283	77.1	—	—	—
－ 맞춤형복지전달 체계구축	6,496	6,460	99.4	4,424	4,389	99.2	2,072	2,071	100.0

□ 집행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집행 예산 총 규모는 56조 4,649억 원으로 2016년 전체 집행예산

에서 81%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6> 집행예산 상위 10개 과제의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16년 결산			예산 비중
			합계	국비	지방비	
상위 10개 과제 합계			564,649	463,934	100,715	81.0
2-2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113,216	113,216	—	16.2
3-1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99,119	75,544	23,575	14.2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79,883	79,883	—	11.5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63,895	48,183	15,712	9.2
2-31~33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58,074	58,074	—	8.3
1-11-1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	47,205	32,052	15,153	6.8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	40,382	—	40,382	5.8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35,642	35,642	—	5.1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17,696	11,803	5,893	2.5
2-25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9,537	9,537	—	1.4

3. 2016년 시행계획 실적 2차 평가결과 평균점수 현황

가. 2016년도 평가점수 평균과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현황

□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2차 평가 결과, 전체 과제의 평균 점수는 86.0점으로 '우수' 등급 수준

○ 사회보장 시행계획상의 과제들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잘 계획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성과도 차질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책목표별 평균 점수는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87.2점으로 가장 높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은 86.0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85.6점으로 가장 낮음
- 특히, 각 정책목표가 우수 등급인 85~87점대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정책목표간 실적에도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평가결과 분야별 평가점수 요약

(단위: 점)

목표	총점 평균 (100점 만점)
전체 (202개)	86.0
- 생애주기별 맞춤형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85.6
- 일을 통한 자립지원 (37개)	87.2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개)	86.0

나. 평가부문별 평가점수 현황

□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의 배점별 달성도³⁾는 사업개요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달성도(85.0%), 추진과정(84.0%)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시행계획의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설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사업개요’는 25점 만점에 22.8점을 받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제의 추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달성도 부문은 85.0%의 달성도(42.5점/50점)를, 과제의 추진일정, 사업관리, 예산집행 관리 등을 측정하는 ‘추진과정’ 부문은 84.0%(21점/총 25점) 달성률을 보여 우수 등급을 보임

□ 세부평가항목별로 볼 때 ‘2-3. 예산집행실적’(96.0%)이 가장 높은 달성도를,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2.0%)이 가장 낮은 달성도를 보임

○ 높은 달성률을 보인 항목은 ‘2-3. 예산집행실적’(96.0%), ‘3-3. 성과달성도’(95.3%),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94.0%) 순임

○ 낮은 달성률을 보인 평가항목은 ‘2-2. 사업관리의 적정성’(72.0%), ‘2-1. 추진일정의 적절성’(78.0%), ‘3-1-1. 성과지표의 적절성’(78.7%) 순임

<표 3-8> 평가기준별 평가점수의 각 배점별 달성도

(단위: 점, %)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	만점 점수	평균 점수	달성도(%)
1. 사업개요	25	22.8	91.2
1-1.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10	9.4	94.0
1-2.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10	9.1	90.0

3) 배점별 달성도 = (평가항목 평균 점수 / 평가항목 만점 점수) x 100

평가부문 및 평가기준	만점 점수	평균 점수	달성도(%)
1-3.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5	4.3	86.0
2. 추진과정	25	21	84.0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10	7.8	78.0
2-2. 사업관리의 적정성	5	3.6	72.0
2-3. 예산집행 실적	10	9.6	96.0
3. 성과달성도	50	42.5	85.0
3-1.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11.8	78.7
3-2.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20	16.4	82.0
3-3. 목표달성도	15	14.3	95.3

※ 2. 추진과정 평균점수는 비예산 사업 점수의 경우 2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시행계획평가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로 볼 때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설계하여 추진 중이며, 다만 성과관리에 필요한 추진과정 및 성과지표 설정의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4. 정책목표별 시행계획 평가결과

가.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 3개의 정책목표별 평균 점수는 모두 8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균점수 간 편차도 작아(0.4~1.6점 내) 고른 평균점수 분포를 보임

○ 정책목표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87.2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86.0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85.6점)의 순으로 평가됨

<표 3-9>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단위: 점)

정책목표	평균 점수	등급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85.6	우수
-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48개)	85.9	우수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2개)	86.8	우수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21개)	84.2	우수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44개)	85.2	우수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7개)	87.2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20개)	86.0	우수

□ 전체 19개 세부 정책분야별 평가점수도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든 정책 분야가 ‘우수’로 평가됨

○ 세부 정책분야 평균점수는 주로 ‘우수’ 등급 이상 평균 점수대인 81.7~92.7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점수 편차도 10점 내외로 비교적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가장 우수한 정책분야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과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을 기록하여 ‘매우우수’로 평가됨

－ 정책분야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은 대학교육비 부담경감,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지원 등 정책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분야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한편, 정책 분야 내에서 세부과제의 평가점수의 편차가 큰 분야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과 ‘노후소득 보장강화’이었음

－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가 67.2점으로 전체 과제 중 최저 점수를 받았고, “노후소득 보장강화”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이 69.1점을 받음

<표 3-10> 평가결과 정책분야별 평가점수 요약

(단위: 개, 점, %)

정책목표	정책 분야	과제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등급
전 체		202	86.0	99.0	67.2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10	89.0	95.9	82.2	우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4	85.3	93.7	76.0	우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24	84.9	97.0	67.2	우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8	83.9	94.0	72.1	우수
	주거안정 대책 강화	7	88.1	96.3	71.7	우수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7	92.7	94.9	86.5	매우우수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3.1	92.0	69.1	우수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8	86.8	97.8	69.0	우수

정책목표	정책 분야	과제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등급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5	81.8	87.0	77.0	우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	85.7	90.7	77.8	우수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3	85.8	95.0	72.2	우수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15	88.0	93.5	81.1	우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13	81.4	92.0	67.8	우수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37)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1	91.2	99.0	83.3	매우우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9	81.7	91.8	70.0	우수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6	85.3	93.0	80.5	우수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11	88.8	94.3	81.3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5	86.5	90.0	81.7	우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5	85.8	93.9	70.0	우수

나.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 세부 과제별 평가등급 분포는 총 202개의 과제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차지한 과제가 166개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흡 등급은 6개로 3%에 그침
- 총 202개 세부과제 중 ‘매우우수’ 74개(36.6%), ‘우수’ 92개(45.5%), ‘보통’ 30개(14.9%), ‘미흡’ 6개(3.0%)로 평가
 - － 미흡 과제는 총 6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일부 과제가 미흡한 성적을 보임
- 정책목표별로 과제의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경우 관련 과제의 약 90%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음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경우 ‘우수’ 이상이 약 79%, 보통이 약 17%, 나머지 4%의 과제는 ‘미흡’ 평가등급에 분포됨

<표 3-11> 정책목표별 추진실적 평가등급

(단위: 개, %)

평가등급	과제 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매우우수	74 (36.6%)	55 (37.9%)	13 (35.1%)	6 (30.0%)
우수	92 (45.5%)	59 (40.7%)	21 (56.8%)	12 (60.0%)
보통	30 (14.9%)	25 (17.2%)	3 (8.1%)	2 (10.0%)
미흡	6 (3.0%)	6 (4.1%)	—	—
총 계	202 (100.0%)	145 (100.0%)	37 (100.0%)	20 (100.0%)

※ 괄호 안의 수치는 정책목표별 해당 과제가 평가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정책목표별 상·하위 5개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12>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상위 5개 과제

(단위: 점)

분야	부처	재정	과제 명	총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훈처	예산	(3-18) 국가 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97.8
	여가부	예산	(1-2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인 학업지원	97.0
	국토부	예산	(2-25) 주거급여확대	96.3
	복지부	예산	(1-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95.9
	국토부	비예산	(2-26)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3-12)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95.5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부	예산	(5-1)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99.0
	교육부	예산	(5-11-2)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96.0
	고용부	예산	(5-5)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95.3
	교육부	예산	(5-11-1)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95.0
	고용부	예산	(5-36)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재편	94.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복지부	예산	(6-16-2) 복지인력확충 추진	93.9
	고용부	예산	(6-25) 사회적 기업 지원 강화	91.8
	복지부	예산	(6-27)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91.0
	복지부	예산	(6-14)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91.0
	복지부	비예산	(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6-2) 신설변경 제도 사전협의 조정방안 마련	90.0

<표 3-13> 정책목표별 평가점수 하위 5개 과제

(단위: 점)

분야	부처	재정	과제 명	총점
생애주기별 맞춤형사회안전망 구축	행안부	예산	(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67.2
	복지부	비예산	(1-39)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67.8
	여가부	예산	(4-33)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67.8
	복지부	예산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68.0
	복지부	예산	(3-11)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69.0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복지부	비예산	(5-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70.0
	복지부	비예산	(5-2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72.2
	고용부	비예산	(5-16)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73.3
	고용부	예산	(5-23)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80.5
	고용부	예산	(5-20)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5-33)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81.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농식품부	비예산	(6-15)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70.0
	행안부	비예산	(6-17-1) 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74.4
	복지부	예산	(6-6)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81.7
	복지부	예산	(6-18)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82.6
	복지부	예산	(6-23)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확대	83.0

다. 예산·비예산 사업별 평가 결과 요약

□ 예산사업의 평가 점수 평균은 86.7점, 비예산 사업의 점수 평균은 83.0점으로 예산사업이 평균 3.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목표별로도 예산, 비예산 사업간 평가점수의 차이는 최소 3점에서 최대 6.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간의 사업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예산·비예산 과제별 평가점수 요약

(단위: 개, 점)

분야		과제 수	총점 평균	1. 사업개요			2. 추진과정			3. 성과 달성도		
				1-1	1-2	1-3	2-1	2-2	2-3	3-1	3-2	3-3
전체 분야 (202개)	예산	160	86.7	9.5	9.2	4.3	7.9	3.7	9.6	11.7	16.5	14.3
	비예산	42	74.8 (83.0)	9.3	8.6	4.4	7.7	3.0	—	11.7	16.1	14.0
생애주기별 맞춤형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예산	120	86.1	9.5	9.3	4.2	7.7	3.8	9.7	11.3	16.2	14.4
	비예산	25	75.0 (83.4)	9.7	8.7	4.6	7.9	2.8	—	12.0	15.6	13.7
일을 통한 자립지원 (37개)	예산	27	89.1	9.5	9.1	4.4	8.2	3.7	9.3	13.3	17.5	14.1
	비예산	10	74.0 (82.2)	8.8	8.5	4.2	7.4	2.9	—	11.0	16.3	14.9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20개)	예산	13	87.6	9.5	8.3	4.1	8.3	3.5	9.7	12.4	17.1	14.7
	비예산	7	74.5 (82.8)	8.7	8.1	4.1	7.4	3.4	—	11.8	17.4	13.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비예산 100점 만점 환산 점수

5. 2015년과 2016년 시행계획 실적 평가결과의 비교

□ 2015년 추진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점수 평균이 2.7점('15년 평균 83.3점) 상승하였으며, 전체 정책목표의 평균점수도 모두 상승하였음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은 전년 대비 3.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도 2.9점, '일을 통한 자립지원'도 1.2점 상승함

<표 3-15> 전년대비 평가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총점 평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5년	83.3	82.7	86.0	82.7
'16년	86.0	85.6	87.2	86.0
전년대비 증감	2.7	2.9	1.2	3.3

□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전 부문에서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0.1점~2.3점 상승됨

○ 사업개요와 추진과정의 경우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성과달성도는 전년과 동일한 평가점수를 보임

- '1. 사업개요'는 전년대비 2.3점, '2. 추진과정'은 미미한 수준인 0.4점 상승, '3. 성과달성도'는 전년과 동일

○ 그러나, 전년도 배점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성과달성도의 평가 점수는 1.3점 상승

- '3-2.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10→20점)', '3-3. 목표달성도(25→15점)'의 점수 배점 변경으로, 두 세부지표 점수의 전년대비 증감은 각각 9.3점, △10.0점의 큰 변화를 보임

<표 3-16> 전년대비 평가점수 비교(3개 평가지표 점수 환산)

(단위: 점)

구분	총점 평균	사업개요				2. 추진과정 (환산 점수)				3. 성과 달성도			
		소계	1-1	1-2	1-3	소계	2-1	2-2	2-3	소계	3-1	3-2	3-3
'15년	83.3	20.5	8.8	7.9	3.8	20.6	7.7	3.4	9.5	42.5	11.1	7.1	24.3
'16년	86.0	22.8	9.4	9.1	4.3	21.0	7.8	3.6	9.6	42.5 (43.8)	11.8	16.4 (8.2)	14.3 (23.8)
전년 대비 증감	2.7	2.3	0.6	1.2	0.5	0.4	0.1	0.2	0.1	0 (1.3)	0.7	9.3 (1.1)	△10.0 (△0.5)

주: ()의 숫자는 전년도 배점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및 증감

□ '우수' 이상 과제 수도 총 166개로 전년 대비 12개('15년 우수 이상 과제 154개) 증가하였음

○ 201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미흡' 이하의 과제는 없었으나, 2016년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총 6개가 '미흡' 평가를 받음

<표 3-17> 전년대비 평가등급 비교

(단위: 개, %)

분야	등급	'15년 과제수	'16년		
			과제수	비중	누적 비중
전체 분야	매우 우수	32	74	36.6	36.6
	우수	122	92	45.5	82.1
	보통	60	30	14.9	97.0
	미흡	—	6	3.0	100.0
	과제 수	214	202	—	—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매우 우수	20	55	37.9	37.9
	우수	82	59	40.7	78.6
	보통	51	25	17.2	95.8
	미흡	—	6	4.1	100.0
	과제 수	153	145	—	—
2. 일을 통한 자립지원	매우 우수	9	13	35.1	35.1

분야	등급	'15년 과제수	'16년		
			과제수	비중	누적 비중
(37개)	우수	27	21	56.8	91.9
	보통	2	3	8.1	100.0
	미흡	—	—	—	—
	과제 수	38	37	—	—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0개)	매우 우수	3	6	30.0	30.0
	우수	13	12	60.0	90.0
	보통	7	2	10.0	100.0
	미흡	—	—	—	—
	과제 수	23	20	—	—

□ 전년 대비 평가 점수가 높아진 과제의 수는 134개(66.3%)로서, 이 중 5점 이상 높아진 과제의 수는 74개(36.6%)

○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향상된 과제 수도 총 37개이었으며, 20점 이상 향상된 과제도 3개가 있음(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21점,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21점, 주거급여 확대 20점)

○ 전년대비 평가점수 상승이 5점 이상 과제는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2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7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5개

<표 3-18> 분야별 전년대비 평가점수 5점 이상 증가 과제 현황

(단위: 점)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62개)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복지부	예산	17.0	90.0	73.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예산	15.7	89.7	74.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예산	10.0	91.0	81.0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예산	8.7	93.7	85.0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교육부	예산	16.0	86.0	70.0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부	비예산	13.4	87.8	74.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인 학업 지원	여가부	예산	8.0	97.0	89.0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여가부	예산	6.0	92.0	86.0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교육부	예산	9.0	90.0	81.0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교육부	예산	8.0	91.0	83.0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학생안전지역 지정	교육부	비예산	10.6	86.7	76.1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예산	5.0	93.0	88.0
	아동발달지원계획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예산	9.0	95.0	86.0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복지부	예산	7.9	87.9	80.0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복지부	예산	13.0	94.0	81.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예산	7.5	91.0	83.5
	금연정책 강화	복지부	예산	5.6	94.0	88.4
	중독 예방 및 통합적 관리	복지부	예산	12.0	91.0	79.0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비예산	5.0	86.7	81.7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예산	20.0	96.3	76.3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국토부	비예산	21.1	95.5	74.4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예산	12.6	91.0	78.4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예산	6.5	94.9	88.4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예산	6.5	94.9	88.4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교육부	예산	6.5	94.9	88.4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산업부	예산	13.1	94.0	80.9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예산	5.1	91.6	86.5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부	예산	7.0	92.0	85.0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복지부	비예산	10.0	84.4	74.4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복지부	비예산	12.7	84.4	71.7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복지부	비예산	13.3	95.5	82.2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복지부	예산	20.9	92.0	71.1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복지부	예산	9.3	92.5	83.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복지부	예산	5.5	91.0	85.5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예산	9.4	97.8	88.4
	재능·경력활용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체부	예산	10.0	87.0	77.0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예산	7.5	85.0	77.5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부	예산	13.3	90.7	77.4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복지부	예산	13.0	88.5	75.5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복지부	예산	8.6	92.0	83.4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고용부	예산	11.0	93.0	82.0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예산	8.0	92.0	84.0
	전공과 확충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교육부	예산	10.5	92.0	81.5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복지부	예산	11.0	84.0	73.0
	장애종합관정체제 개편	복지부	예산	13.1	95.0	81.9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예산	10.1	89.0	78.9
	장애학생 학습 지원	교육부	예산	10.0	87.0	77.0
	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문체부	예산	13.1	86.0	72.9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농식품부	예산	12.3	93.5	81.2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	복지부	비예산	8.6	91.1	82.5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육성	농식품부	예산	6.5	85.0	78.5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식품부	예산	6.9	87.0	80.1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예산	10.5	90.0	79.5
	농촌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지원	문체부	예산	10.0	90.2	80.2
	여성농업인 양육지원	농식품부	예산	13.2	89.0	75.8
	결혼이민여성 농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예산	9.8	89.3	79.5
	취약가구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	예산	12.6	88.0	75.4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보완 및 관리강화	농식품부	예산	6.9	86.2	79.3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가부	예산	6.5	81.0	74.5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교육부	예산	6.0	85.0	79.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여가부	예산	7.9	90.9	83.0
2. 일을 통한 자립지원 (7개)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강화	복지부	예산	9.5	90.0	80.5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실시	고용부	비예산	5.6	86.7	81.1
	청년 창업 활성화	중기부	예산	7.0	89.0	82.0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고용부	예산	6.4	92.9	86.5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예산	13.7	96.0	82.3
	적정 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고용부	비예산	17.2	92.2	75.0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확대	복지부	예산	5.3	93.8	88.5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5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재편	고용부	예산	6.8	94.3	87.5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복지부	비예산	15.5	90.0	74.5
	복지인력 확충 추진	복지부	예산	11.1	93.9	82.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부	예산	11.3	88.8	77.5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복지부	비예산	15.0	85.5	70.5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부	예산	7.7	91.0	83.3

□ 전년도 보다 평가 점수가 낮아진 과제의 수는 58개(28.7%)로서, 이 중 5점 이상 낮아진 과제의 수는 31개(15.3%)

○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하락된 과제 수도 총 14개이었으며, 15점 이상 하락한 과제 3개가 있음(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15.8점,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17점, 5-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15점 감소)

–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5점 이하 과제는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과제가 23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관련 과제가 7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이 1개

<표 3-19> 분야별 전년대비 평가점수 5점 이상 감소 과제 현황

(단위: 점)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3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복지부	비예산	△12.2	77.8	90.0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강화	복지부	예산	△5.0	82.0	87.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예산	△14.0	76.0	90.0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여가부	예산	△5.3	82.4	87.7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비예산	△12.2	78.9	91.1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여가부	예산	△5.0	85.0	90.0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복지부	예산	△10.0	68.0	78.0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행안부	예산	△15.8	67.2	83.0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	비예산	△5.8	83.3	89.1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비예산	△7.7	86.7	94.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예산	△12.6	76.9	89.5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예산	△11.5	78.0	89.5
	생활체육 지원 강화	문체부	예산	△11.5	73.0	84.5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예산	△12.3	72.1	84.4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부	예산	△5.0	83.0	88.0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복지부	예산	△13.3	74.9	88.2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예산	△6.5	82.0	88.5

정책목표	과제명	부처	예산/ 비예산	차이 (A-B)	16년 (A)	15년 (B)
	실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복지부	예산	△5.2	75.4	80.6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복지부	예산	△13.8	69.0	82.8
	급성기 이후 노인의료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예산	△7.2	73.3	80.5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예산	△5.2	67.8	73.0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예산	△17.0	72.0	89.0
	한부모가족 주거생활안정지원	여가부	예산	△5.6	73.9	79.5
2. 일을 통한 자립지원 (7개)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교육부	예산	△5.5	87.5	93.0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	비예산	△6.7	73.3	80.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부	비예산	△11.7	72.2	83.9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비예산	△15.0	70.0	85.0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고용부	예산	△8.4	82.8	91.2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예산	△7.7	82.8	90.5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산업현장 교수단)	고용부	예산	△5.6	84.9	90.5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1개)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농식품부	비예산	△6.7	70.0	76.7

6. 평가부진 과제의 평가결과 세부분석

□ 2016년 시행계획 평가에서 70점 미만으로 '미흡' 이하의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과제 수는 총 6개로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최소 2.2점에서 최대 15.8점 감소하였음

<표 3-20> 미흡 과제 현황

(단위: 점)					
과제명	부처	재정	2016	2015	전년대비 감소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복지부	예산	68.0	78.0	△10.0
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행안부	예산	67.2	83.0	△15.8
1-39.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복지부	비예산	67.8	70.0	△2.2
3-8.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고용부	예산	69.1	74.0	△4.9
3-11.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복지부	예산	69.0	82.8	△13.8
4-33.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예산	67.8	73.0	△5.2

○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평가부문은 주로 성과목표치의 적절성(5개), 추진일정의 적정성(4개)이었음

<표 3-21> 미흡 과제와 미흡평가 사유

(단위: 점)

과제명	2016	미흡 사유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68.0	추진일정의 적절성(1/10)이 매우 낮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1/20)도 미흡
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67.2	성과목표치의 적정성(2/20)이 미흡
1-39.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67.8	성과목표치 적정성(10/20), 목표달성도(10/15) 미흡
3-8.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69.1	성과목표치 적정성(12/20), 예산집행실적(5.1/10)
3-11. 국가차매 관리체계 확립	69.0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0/20), 추진일정의 적절성(5/10), 사업관리의 적정성(2/5) 미흡
4-33.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67.8	성과지표의 적절성(5/15)이 부족하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0/20)이 미흡, 추진일정의 적절성도 부족(4/10)

※ (/) 안의 수치는 분모는 기준배점, 분자는 평가점수를 나타냄

□ 전년대비 10점 이상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과제는 총 13개이었으며, 이중 15점 이상의 감점을 받은 과제는 2개

- 각각의 과제에서 실적달성률이 특히 낮은 평가부문은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12개), 사업관리의 적정성(6개),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족(5개), 추진일정의 적절성(6개)이었음
- － 전년보다 10점 이상의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과제들은 대부분 평가부문 ‘성과달성도’ 부문(50)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들임

<표 3-22> 전년 대비 10점 이상 감점 과제와 감점 사유

(단위: 점)

과제명	2015	2016	전년대비 감소	주요 이유
1-1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90.0	77.8	△12.2	성과지표의 적절성(7/15),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1-1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90.0	76.0	△14.0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2/5), 사업관리의 적정성(2/5)
1-21-2. 유보통합 추진	91.1	78.9	△12.2	성과목표 달성도(5/15) 미흡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78.0	68.0	△10.0	추진일정의 적절성(1/10)이 매우 낮고,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1/20)도 미흡
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83.0	67.2	△15.8	성과목표치의 적정성(2/20)이 미흡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89.5	76.9	△12.6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사업관리의 적정성(1/5), 성과지표의 적절성(10/15)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89.5	78.0	△11.5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사업관리의 적정성(2/5),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6/10)
2-8. 생활체육 지원 강화	84.5	73.0	△11.5	성과목표 달성도(5/15), 성과지표의 적절성(7/15), 추진일정의 적절성(6/10)
2-14.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84.4	72.1	△12.3	사업관리의 적정성(1/5), 추진일정의 적절성(3/10),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과제명	2015	2016	전년대비 감소	주요 이유
2-20.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88.2	74.9	△13.3	성과지표의 적절성(5/15),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2/5),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3-11.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82.8	69.0	△13.8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0/20), 추진일정의 적절성(5/10), 사업관리의 적정성(2/5) 부족
5-2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83.9	72.2	△11.7	사업관리의 적정성(1/5), 추진체계의 적절성(5/10),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2/20)
5-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85.0	70.0	△15.0	성과지표의 적절성(4/15), 추진일정의 적절성(4/10),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3/20)

※ (/) 안의 수치는 분모는 기준배점, 분자는 평가점수를 나타냄

□ 2016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복수의 중앙 부처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과제는 과제번호 기준으로 총 16개(세부과제 기준으로 33개)이었음

○ 3개의 부처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1개이며 나머지 16개는 2개의 부처가 과제를 수행 중

- 3개 부처(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참여 과제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평가점수는 83~90점으로 우수 등급에 고르게 분포
- 나머지 2개 부처가 참여한 과제 중 10점 미만의 점수 차이가 나는 과제는 총 15개 과제 중 10개로서 대부분 1~4점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제는 5개

<표 3-23> 복수 부처의 추진 과제 현황

(단위: 점)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평가점수
1-11	1-11-1.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	88.0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	92.0
1-14	1-1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복지부	77.8
	1-14-2.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고용부	90.8
1-21	1-21-1. 유보통합 추진	국조실	86.7
	1-21-2.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78.9
1-28	1-28-1.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여가부	92.0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복지부	68.0
1-29	1-29-1.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복지부	87.0
	1-29-2.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교육부	90.0
	1-29-3.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여가부	83.0
1-31	1-31-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육부	80.0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평가점수
	1-31-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복지부	76.0
2-29	2-29-1.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82.0
	2-29-2.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교육부	90.0
4-26	4-26-1.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농식품부	81.1
	4-26-2.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90.0
4-30	4-30-1. 여성농업인 양육지원	농식품부	89.0
	4-30-2. 결혼이민여성 농촌정착 지원	농식품부	89.3
4-34	4-34-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여가부	72.0
	4-34-2.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자녀 교육지원 확대	교육부	84.0
4-35	4-35-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가부	81.0
	4-35-2.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교육부	85.0
4-38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72.0
	4-38-2. 한부모가족 주거생활안정지원	여가부	73.9
5-26	5-26-1.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고용부	82.8
	5-26-2.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산업현장 교수단)	고용부	84.9
5-34	5-34-1.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	고용부	93.0
	5-34-2.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복지부	91.1
6-16	6-16-1. 복지인력 확충 추진	행안부	86.7
	6-16-2. 복지인력 확충 추진	복지부	93.9
6-17	6-17-1. 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행안부	74.4
	6-17-2.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복지부	88.0

○ 각각의 부처가 동일한 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평가점수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다부처 과제의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각 부처의 실적관리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평가점수 배점이 높은 '성과 달성도(50)' 부문에서 부처간 평가 점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성과달성도 부문에서도 특히,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에서의 점수 차이가 주된 원인이므로, 부처 소관부서의 개별 과제 관리상의 문제로 보이며, 부처 간 조정 미흡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표 3-24> 부처간 평가점수 편차가 큰 과제 현황 및 편차의 사유

(단위: 점, %)

과제 번호	과제명	부처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1-14	1-1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복지부	77.8	성과지표의 적절성(7, 14)
	1-14-2.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고용부	90.8	
1-21	1-21-1. 유보통합 추진	국조실	86.7	추진일정의 적절성(7, 2), 목표달성도(11, 5)
	1-21-2.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78.9	
1-28	1-28-1.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여가부	92.0	추진내용의 적정성(4, 1), 추진일정의 적절성(8, 1), 성과지표의 적절성(13, 9), 성과목표치의 적정성(18, 11)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복지부	68.0	
4-34	4-34-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여가부	72.0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6, 10), 사업관리의 적정성(1, 5)
	4-34-2.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자녀 교육지원 확대	교육부	84.0	
6-17	6-17-1 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행안부	74.4	사업개요, 추진과정, 성과달성도 등에서 각각 2점씩 낮음
	6-17-2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복지부	88.0	

※ (,) 안의 수치는 각각의 과제가 해당 평가지표에서 취득한 평가 점수

제4절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및 주요 성과

1. 평가결과 개요

□ 19개 정책분야가 큰 차이 없이 고르게 평가되었으며, 대다수 정책분야가 '우수'로 평가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과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은 전체 평균이 90점 이상을 기록하여 '매우우수'로 평가

<표 3-25>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단위: 점)

정책목표	정책분야	과제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등급
전 체		202	86.0	99.0	67.2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5개)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10	89.0	95.9	82.2	우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4	85.3	93.7	76.0	우수

정책목표	정책분야	과제 수	평균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등급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24	84.9	97.0	67.2	우수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8	83.9	94.0	72.1	우수
	주거안정 대책 강화	7	88.1	96.3	71.7	우수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7	92.7	94.9	86.5	매우우수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83.1	92.0	69.1	우수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8	86.8	97.8	69.0	우수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5	81.8	87.0	77.0	우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	85.7	90.7	77.8	우수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3	85.8	95.0	72.2	우수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15	88.0	93.5	81.1	우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13	81.4	92.0	67.8	우수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37개)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1	91.2	99.0	83.3	매우우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9	81.7	91.8	70.0	우수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6	85.3	93.0	80.5	우수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11	88.8	94.3	81.3	우수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20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5	86.5	90.0	81.7	우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5	85.8	93.9	70.0	우수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가.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0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과제는 5개이며, 평균 점수는 89.0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26>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9.0	우수
1-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복지부	95.9	매우우수
1-5	난임부부 지원	복지부	94.0	매우우수
1-8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복지부	91.1	매우우수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91.0	매우우수
1-3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복지부	90.0	매우우수
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복지부	89.7	우수
1-4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복지부	87.0	우수
1-2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복지부	85.0	우수
1-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복지부	83.6	우수
1-10	새아기 장려금 지원	기재부	82.2	우수

□ 주요 성과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

－ 무료예방접종 확대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강화

- 만 3세 이하 어린이 완전접종률: ('12년) 80.5%→('14년) 88.4%→('16년) 92.4%
- '16년 추가 지원백신 항목: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이용자 수: ('14년) 67,791명→('16년) 82,313명

－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을 제고

- 난임시술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 ('14년) 15,636명 → ('16년) 19,736명

②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4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3개, 우수과제는 8개, 보통과제는 3개이며, 평균 점수는 85.3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27>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5.3	우수
1-18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93.7	매우우수
1-11-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교육부	92.0	매우우수
1-14-2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고용부	90.8	매우우수
1-17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복지부	89.0	우수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복지부	88.0	우수
1-11-1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복지부	88.0	우수
1-21-1	유보통합 추진	국조실	86.7	우수
1-20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교육부	86.0	우수
1-13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복지부	83.0	우수
1-1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여가부	82.4	우수
1-15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강화	복지부	82.0	우수
1-21-2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78.9	보통
1-1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복지부	77.8	보통
1-1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76.0	보통

□ 주요 성과

- 보육 인프라 확대, 보육 서비스의 품질 강화, 양육수당 도입을 통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14년) 97개소→('15년) 237개소→('16년) 382개소
- 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4년) 54,362가구→('15년) 58,687가구→('16년) 61,221가구

－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보육교사의 자격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를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16년) 7개소 60억원 지원

-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보육교사 자격강화)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6년 1월)
-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어린이집 평가제)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발의('16년 10월)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4년) 93개→('15년) 114개→('16년) 145개

③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24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9개, 우수 과제는 9개, 보통 과제는 3개, 미흡 과제는 3개이며, 평균 점수는 84.9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2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4.9	우수
1-2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인 학업 지원	여가부	97.0	매우우수
1-36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활성화	복지부	95.0	매우우수
1-38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복지부	95.0	매우우수
1-41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복지부	94.0	매우우수
1-3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재발방지 제도 강화	여가부	93.7	매우우수
1-37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93.0	매우우수
1-28-1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여가부	92.0	매우우수
1-30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교육부	91.0	매우우수
1-29-2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교육부	90.0	매우우수
1-40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복지부	87.9	우수
1-24	학교체육 활성화	교육부	87.8	우수
1-29-1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복지부	87.0	우수
1-33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 - 학생안전지역 지정	교육부	86.7	우수
1-22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교육부	86.0	우수
1-25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여가부	85.0	우수
1-23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배치	문체부	85.0	우수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1-29-3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여가부	83.0	우수
1-31-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육부	80.0	우수
1-26	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가족중심 여가문화 활성화	문체부	77.8	보통
1-31-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복지부	76.0	보통
1-32	어린이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환경부	72.8	보통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복지부	68.0	미흡
1-39	아동보호 관련기관 통합·조정 및 지자체 책임 강화	복지부	67.8	미흡
1-34	어린이 활동 지역 CCTV 설치 확대	행안부	67.2	미흡

□ 주요 성과

-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을 개발·지원하고, 아동권익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학습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종합적 역량 개발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현황: ('15년) 199개소→('16년) 202개소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4년) 24개소→('15년) 33개소→('16년) 37개소
 - 학대·성범죄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를 강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국회 제출('16년 11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14년) 36개소→('15년) 46개소→('16년) 53개소
 - 드림스타트 수혜아동 수: ('14년) 107,127명→('15년) 125,562명→('16년) 134,853명
-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살 고위험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자살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인터넷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 ('15년) 1,672명→('16년) 2,380명

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8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8개, 보통 과제는 5개이며, 평균 점수는 83.9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2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3.9	우수
2-11	금연정책 강화	복지부	94.0	매우우수
2-10	보건소 기능 강화	복지부	93.0	매우우수
2-13	중독 예방 및 통합적 관리	복지부	91.0	매우우수
2-9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91.0	매우우수
2-1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90.0	매우우수
2-2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86.7	우수
2-18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86.7	우수
2-21	응급의료체계 개선	복지부	86.0	우수
2-17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복지부	85.5	우수
2-3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복지부	84.4	우수
2-1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	83.3	우수
2-16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부	83.0	우수
2-12	주류에 대한 규제 강화	복지부	81.0	우수
2-7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질 향상	복지부	78.0	보통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76.9	보통
2-20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복지부	74.9	보통
2-8	생활체육 지원 강화	문체부	73.0	보통
2-14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복지부	72.1	보통

□ 주요 성과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부담을 경감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고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방법 개선 등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4건 실시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범위 확대 신규 항목: ('14년) 100개→('15년) 258개→('16년) 289개
 - 병원 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병부담 및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15년) 7,400병상→('16년) 19,000병상
-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및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
 - 흡연 및 기타 중독 등 건강을 해치는 위해요인들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담배반출량: ('14년) 4,563백만갑→('16년) 3,373백만갑
 -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이용자 수: ('15년) 13,556명→('16년) 16,576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인원 : ('15년) 8,933명→('16년) 9,408명
 - 취약지역에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14년) 5개소→('15년) 5개소→('16년) 7개소

② 주거안정 대책 강화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7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1개, 보통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88.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0> 주거안정 대책 강화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8.1	우수
2-25	주거급여 확대	국토부	96.3	매우우수
2-26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국토부	95.5	매우우수
2-2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국토부	91.0	매우우수
2-29-2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교육부	90.0	매우우수
2-2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90.0	매우우수
2-29-1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82.0	우수
2-23	하우스푸어 지원 강화	국토부	71.7	보통

□ 주요 성과

○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

－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개량을 지원

- '16년 주거급여 지급규모 및 지급액: 약 80.6만 가구에 월평균 111,000원 지급
- 주택개량 지원호수: ('15년) 9,787호수→('16년) 21,207호수

－ 주거복지 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한 마이홈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 '16년 마이홈센터 4개소 추가 및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456회 실시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

- 공공임대주택공급 호수: ('14년) 10.2만 호수→('15년) 12.4만 호수→('16년) 12.5만 호수
- 행복기숙사 수혜인원: ('15년) 2,048명→('16년) 3,526명

③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7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1개, 보통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92.7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1>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92.7	매우우수
2-31 2-32 2-33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교육부	94.9	매우우수
2-38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94.0	매우우수
2-36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산업부	94.0	매우우수
2-37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지원	금융위	90.0	우수
2-30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	86.5	보통

□ 주요 성과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
 - '16년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으로 약 4조 109억원을 확보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14년) 48%→('15년) 51%→('16년) 51%
 - *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 교내외장학금 + 대학자체노력)/'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 1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년부터 '16년까지 27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 139억원 지원
 - 학자금 이자지원 금액: ('14년) 15.6억원→('15년) 27.2억원→('16년) 25.2억원
-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및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서민 금융지원체계를 강화
 - 채무조정 수혜자 수: ('14년) 13.7만 명→('15년) 17.2만 명→('16년) 15.8만 명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실적: ('15년) 5,800건→('16년) 64,000건

다.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Ⅰ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8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3개, 우수 과제는 2개, 보통 과제는 2개, 미흡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2> 노후소득 보장 강화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3.1	우수
3-4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부	92.0	매우우수
3-2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복지부	92.0	매우우수
3-1	기초연금 도입	복지부	91.6	매우우수
3-7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복지부	84.4	우수
3-6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복지부	84.4	우수
3-3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내실화	복지부	75.5	보통
3-5	실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복지부	75.4	보통
3-8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고용부	69.1	미흡

□ 주요 성과

- 노인일자리 다양화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
 -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취창업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제공
 - 노인일자리 창출 수: ('14년) 336천 명→('15년) 386천 명→('16년) 430천 명
 - 시니어인턴십 계속고용률: ('14년) 52.4%→('15년) 57.1%→('16년) 68.0%
 -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년) 100만원→('17년) 119만원
-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 장애·유족연금 수급요건 개선, 분할연금 청구기간 연장 등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
- 공사연금 정보연계 종합포털 서비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공·사연금 정보연계 포털서비스 오픈('16년 4월)

②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8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1개, 보통 과제는 1개, 미흡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3>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6.8	우수
3-18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97.8	매우우수
3-12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복지부	95.5	매우우수
3-15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복지부	92.5	매우우수
3-14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향상	복지부	92.0	매우우수
3-16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복지부	91.0	매우우수
3-17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	복지부	83.0	우수
3-13	급성기 이후 노인의료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73.3	보통
3-11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복지부	69.0	미흡

□ 주요 성과

- 보훈병원 및 요양병원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원
-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요양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 강화
 -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경량 보철기구 공급: ('15년) 44건→('16년) 298건
 - 국가유공자 낙상예방클리닉 주 5회 운영
 - 1:1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통해 보훈요양원의 요양등급 및 기능 향상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16년 이용자 수 15,801명
 - 인증 2주기('17~'20년)에 적용할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
-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및 자살을 예방하여 노인 보호체계를 강화
- 만 65세 이상 독거 취약노인에게 정기적 안부(돌봄기본서비스) 및 가사·활동지원(돌봄종합서비스) 제공

- 돌봄기본서비스 '16년 이용자 수: 22만명, 돌봄종합서비스 '16년 이용자 수: 4.1만명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예방 사업 수행

③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5개 중 우수 과제는 3개, 보통 과제는 2개이며,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4>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1.8	우수
3-23	재능·경력활용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체부	87.0	우수
3-25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85.0	우수
3-21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복지부	81.9	우수
3-22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복지부	78.2	보통
3-20	평생학습 기회 확대	교육부	77.0	보통

□ 주요 성과

-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재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람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및 문화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해 만 60세 이상 노인의 자발적인 문화자원봉사를 활성화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참여자 수: ('14년) 2,571명→ ('15년) 3,968명→ ('16년) 3,670명
 - 노인의 여가기회 확대를 위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16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14,137회
-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

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①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3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1개, 우수 과제는 1개, 보통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85.7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5>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5.7	우수
4-3-2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부	90.7	매우우수
4-5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복지부	88.5	우수
4-3-1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부	77.8	보통

□ 주요 성과

-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건복지콜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및 행정체계 강화
 - 전체 읍·면·동 3,496개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민간 인력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률: ('15년) 90.1%→('16년) 100%
 - 보건복지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콜센터 평일평균 콜량: ('14년) 5,593건→('15년) 6,022건→('16년) 6,447건
 -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6년 연속 우수 콜센터 지정('11~'16년)

②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3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4개, 보통 과제는 4개이며, 평균 점수는 85.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6>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5.8	우수
4-11	장애종합관정체계 개편	복지부	95.0	매우우수
4-7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고용부	93.0	매우우수
4-9	전공과 확충 및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확대	교육부	92.0	매우우수
4-8	장애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92.0	매우우수
4-6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복지부	92.0	매우우수
4-12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복지부	89.0	우수
4-13	장애학생 학습 지원	교육부	87.0	우수
4-14	장애인 문화예술·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문화부	86.0	우수
4-10	장애인 일자리 지속 확대	복지부	84.0	우수
4-15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국토부	78.0	보통
4-17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복지부	78.0	보통
4-18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복지부	77.0	보통
4-16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시설 확대	복지부	72.2	보통

□ 주요 성과

-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수급률 증가 및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장애인연금 수급률(수급자 수): ('15년) 67.3%(34.2만 명)→('16년) 68.4%(35만 명)
 - 1인 가구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6년) 100만 원→('17년) 119만 원
- 개편된 장애종합관정체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 증진에 기여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 및 관계법령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18개 부처가 참석해 12개 법률, 20개 시행령, 22개 시행규칙에 대하여 개정방향 논의
 - 주간활동서비스 추진 등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 수 증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수: ('14년) 53,870명→('15년) 60,521명→('16년) 66,534명
-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지원
 -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 재정지원 일자리 수혜자 수: ('14년) 14,591명→('15년) 14,879명→('16년) 14,827명
- 고등부 학생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투게더 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
- 워크투게더 센터 서비스 이용자수: ('14년) 2,109명→('15년) 2,292명→('16년) 2,801명
- 인턴제 참여 중증장애인 정규직 전환율: ('15년) 63.9%→('16년) 71.3%
-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명단공표 및 이행지도를 실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유도
- 의무채용 저조기업 신규채용: ('15년) 1,734명→('16년) 2,105명

③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5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10개이며, 평균 점수는 88.0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7>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8.0	우수
4-20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농식품부	93.5	매우우수
4-21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	복지부	91.1	매우우수
4-19	농지연금 보장 확대	농식품부	91.0	매우우수
4-27	농촌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지원	문체부	90.2	매우우수
4-26-2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90.0	매우우수
4-30-2	결혼이민여성 농촌 정착 지원	농식품부	89.3	우수
4-30-1	여성농업인 양육지원	농식품부	89.0	우수
4-31	취약가구 도우미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	88.0	우수
4-28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87.6	우수
4-25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식품부	87.0	우수
4-23	불량·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식품부	86.3	우수
4-32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보완 및 관리강화	농식품부	86.2	우수
4-24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육성	농식품부	85.0	우수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4-22	연금·건강보험료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농식품부	84.0	우수
4-26-1	농어촌 학교육성 및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농식품부	81.1	우수

□ 주요 성과

-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고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소득보장 기반 강화
 - 농지연금 지급액: ('14년) 290억 원→('15년) 402억 원→('16년) 522억 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4년) 16.2%→('15년) 21.8%→('16년) 27.5%
-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여성·이민여성인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어업지역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
 - 소외계층 문화순회 수혜자 수: ('14년) 588,994명→('15년) 648,211명→('16년) 754,223명
 - 방방곡곡문화공감 수혜자 수: ('14년) 412,733명→('15년) 527,805명→('16년) 654,982명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촌지역 보육사각지대 해소 및 보육여건 개선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개소 수: ('14년) 25개소→('15년) 27개소→('16년) 28개소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게 농기구와 농작물에 대한 농업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의 역사·문화체험 기회 제공
 - 결혼이민여성 교육이수자 수: ('14년) 2,818명→('15년) 2,772명→('16년) 2,778명
-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1군별 1 우수중학교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14년) 50교→('15년) 80교→('16) 60교

④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3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3개, 우수 과제는 6개, 보통과제는 3개, 미흡 과제는 1개이며, 평균 점수는 81.4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1.4	우수
4-4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법무부	92.0	매우우수
4-40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여가부	90.9	매우우수
4-42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강화	복지부	90.0	매우우수
4-3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	87.0	우수
4-35-2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교육부	85.0	우수
4-34-2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자녀 교육지원 확대	교육부	84.0	우수
4-43	노숙인 의료 지원 강화	복지부	81.1	우수
4-37	지역사회 한부모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81.0	우수
4-35-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여가부	81.0	우수
4-38-2	한부모가족 주거생활안정지원	여가부	73.9	보통
4-38-1	주거 생활 안정 지원	국토부	72.0	보통
4-34-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여가부	72.0	보통
4-33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67.8	미흡

□ 주요 실적

○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와 예방체계를 강화

-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횟수: ('15년) 3,850회→('16년) 3,903회
-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횟수: ('15년) 404회→('16년) 502회

- 성폭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 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 ('14년) 224,888건→('15년) 238,127건
→('16년) 264,922건

○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확대

-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액 인상 추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13년) 월 7만원→('15년) 월 10만원→('17년) 월 12만원

-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를 포함하는 다문화 중점학교와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예비학교 확대
 -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14년) 120교→('15년) 150교→('16년) 180교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14년) 80교→('15년) 100교→('16년) 124교

3.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1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5개, 우수 과제는 6개이며, 평균 점수는 91.2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39>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91.2	매우우수
5-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고용부	99.0	매우우수
5-11-2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96.0	매우우수
5-5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고용부	95.3	매우우수
5-11-1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육부	95.0	매우우수
5-7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고용부	92.9	매우우수
5-10	일학습병행제 추진	고용부	89.9	우수
5-6	청년 창업 활성화	중기부	89.0	우수
5-8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89.0	우수
5-9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교육부	87.5	우수
5-4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실시	고용부	86.7	우수
5-3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	행안부	83.3	우수

□ 주요 성과

- 84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보급하여 공공기관 채용에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시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NCS 활용(채용, 훈련 등) 공공 및 민간기업 수: ('15년) 1,200개→('16년) 1,280개
- 민간훈련 NCS 적용 직종 수: ('15년) 463직종→('16년) 701직종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

- 해외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해외취업 기회 확대
 - '16년 찾아가는 멘토링 1,336명 참여,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과정(K-Move) 1,226명 선정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채용형 인턴제를 실시하여 청년 취업 및 안정적 일자리로의 연계를 제고
 -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14년) 64.4%→('15년) 75.8%→('16년) 77.1%
- 2015~2016년 동안 203명의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현장근무 기회(인턴)를 제공하고, 인턴수료자 중 선정평가를 통해 54명에게 창업 사업화 지원
- 만 34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실시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 청년고용 의무제 대상기업 청년 신규 고용률: ('14년) 4.8%→('15년) 4.8%→('16년) 5.9%

○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 해소

- 선취학·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9개교 선정 및 지원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희망사다리)을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연계 교육과정 제공
 - 희망사다리 1인당 평균 지원금액: ('14년) 6.3백만 원→('15년) 6.1백만 원→('16년) 6.9백만 원
 - 산학협력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15년) 35,757명→('16) 39,675명

②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9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1개, 우수 과제는 5개, 보통 과제는 3개이며, 평균 점수는 81.7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4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1.7	우수
5-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여가부	91.8	매우우수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5-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용부	87.5	우수
5-13	육아휴직제도 개선	고용부	87.3	우수
5-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용부	86.0	우수
5-15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여가부	86.0	우수
5-20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고용부	81.3	우수
5-16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용부	73.3	보통
5-2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부	72.2	보통
5-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70.0	보통

□ 주요 성과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여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수혜자 수(여성): ('14년) 76,833명→('15년) 87,339명→('16년) 89,795명
 -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수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14년) 1,116명→('15년) 2,061명→('16년) 2,761명
 -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특성을 고려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신규 지정: 일반형 2개소, 경력개발형 1개소, 농어촌형 1개소, 광역형 1개소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14년) 956개→('15년) 1,363개→('16년) 1,828개

③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6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1개, 우수 과제는 5개이며, 평균 점수는 85.3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41>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5.3	우수
5-27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확대	보훈처	93.0	매우우수
5-24	정년연장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고용부	87.9	우수
5-26-2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산업현장 교수단)	고용부	84.9	우수
5-26-1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사회공헌활동 지원)	고용부	82.8	우수
5-25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고용부	82.8	우수
5-23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고용부	80.5	우수

□ 주요 성과

○ 퇴직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

- 전역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재취업 지원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수: ('14년) 5,544명→('15년) 8,134명→('16년) 9,165명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 및 재직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

• 중장년 전직성공자 수: ('14년) 36,164명→('15년) 54,748명→('16년) 66,344명

○ 전문성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되어 고숙련기술을 전수하도록 지원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수: ('15년) 5,805명→('16년) 5,923명

• 산업현장교수 지원 기관 수: ('15년) 1,531개→('16년) 1,714개

④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1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6개, 우수 과제는 5개이며, 평균 점수는 88.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42> 근로빈곤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8.8	우수
5-36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재편	고용부	94.3	매우우수
5-32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확대	복지부	93.8	매우우수
5-34-1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통합 전달체계 구축	고용부	93.0	매우우수
5-29	적정 최저임금 수준 마련 및 준수	고용부	92.2	매우우수
5-37	자활사업 성과 제고	복지부	91.6	매우우수
5-34-2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운영	복지부	91.1	매우우수
5-31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재부	87.8	우수
5-2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고용부	86.6	우수
5-30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83.3	우수
5-35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조정·연계	고용부	82.2	우수
5-33	고용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고용부	81.3	우수

□ 주요 성과

○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촉진

-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유도하여 탈수급 촉진
 - 최근 3년간 희망키움통장 탈수급률(탈수급 해지자 수/가입자 수): 67.6%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제공(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률: ('15년) 63.6%→('16년) 78.7%

○ 저임금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12년) 8.4%→('14년) 6.3%→('16년) 4.3%
 -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 ('14년) 218천 명→('15년) 201천 명→('16년) 201천 명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14년) 7.1%→('15년) 8.1%→('16년) 7.3%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비전속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령 공포('16년 7월)
- 다양한 고용·복지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종합 센터 30개소 신규 설치

4.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5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2개, 우수 과제는 3개이며, 평균 점수는 8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4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6.5	우수
6-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	복지부	90.0	매우우수
6-2	신설·변경 제도 사전협의 조정 방안 마련	복지부	90.0	매우우수
6-1	사회보장정책 운영방향 수립	복지부	87.5	우수
6-12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복지부	83.3	우수
6-6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지원	복지부	81.7	우수

□ 주요 실적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구축,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사회보장제도 조정 능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 사회보장통계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지원
 - 사회보장통계 생산 건(누적): ('14년) 227건→('15년) 253건→('16년) 263건
 -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 간 효율적인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 건: ('14년) 75건→('15년) 282건→('16년) 684건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법률 개정안 제출(’16년 8월)

②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평가 결과

- 전체 세부과제 15개 중 매우우수 과제는 4개, 우수 과제는 9개, 보통 과제는 2개이며, 평균 점수는 85.8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

<표 3-44>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평가결과

(단위: 점)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	점수	등급
전체 평균			85.8	우수
6-16-2	복지인력 확충 추진	복지부	93.9	매우우수
6-25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고용부	91.8	매우우수
6-27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복지부	91.0	매우우수
6-14	동(洞)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부	91.0	매우우수
6-26	협동조합 인센티브 강화 등 활성화 유도	기재부	89.8	우수
6-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부	88.8	우수
6-17-2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복지부	88.0	우수
6-16-1	복지인력 확충 추진	행안부	86.7	우수
6-22	규제완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 유도	복지부	86.0	우수
6-2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복지부	85.5	우수
6-21	나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복지부	84.0	우수
6-23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복지부	83.0	우수
6-18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82.6	우수
6-17-1	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행안부	74.4	보통
6-15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농식품부	70.0	보통

□ 주요 성과

- 읍·면·동 700개소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0개소를 선정 하여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
 - 지역 간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규모: ('15년) 2,037명→('16년) 2,578명
 - 사회복지담당 인력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
 - 사회복지 인력 역량강화교육 실시 횟수: ('14년) 48회→('15년) 54회→('16) 66회
 -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제 4 장

평가제도 개선방안

- 제1절 정부업무 평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의 과제
- 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정부업무 평가 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의 과제

-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임
- 지난 2017년 8월 25일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성과관리의 일원화, 자체평가 강화, 평가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평가결과의 공개 등임
 - 「국가재정법」 상의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의 자체평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기능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제출)
 - ⇒ 이와 같은 성과관리 제도의 일원화는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의 기능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사회보장분야 차원에서의 성과관리라는 차원이 강조되는 실적평가체계 수립의 필요성 증가
 - 현재의 평가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소관부서의 성과관리 자체를 강화, 자체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관부서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모색 중
 - 평가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평가 수당의 현실화, 평가 관련 전문 직렬 및 전문관 제도 도입/활성화,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메타평가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
 - ⇒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평가 형태의 실적 점검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에서 평가의 정책지원 기능의 강화
 - 특히,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다부처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재정사업평가는 개선방향 및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방형 성과포털 구축을 고려 중
- ⇒ 사업 또는 과제별 개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행계획 평가를 정책목표 또는 정책분야별 성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보장관련 개별법 상의

평가와의 유사·중복성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고유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기본·핵심평가 간 상호 연계 및 통합 등 사회보장위원회 내 시행 중인 평가제도의 재설계 필요

○ 정부업무평가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환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 기능을 유지하되 부처의 책임성 제고와 국민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 환류를 고려 중

⇒ 사회보장 시행계획과 다른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이와 같은 정부의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업무 개편 노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실적평가와 다른 평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시행계획 실적평가의 체계화, 자체평가 내실화,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 차원에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는 성과관리제도와 유사하므로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성과관리제도로써 자리잡는 것이 필요

－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타 기관의 평가제도와 중복성을 피하면서 사회보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제2절 평가제도 개선방안

1. 시행계획 평가 개선방안

가.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화

□ 시행계획 실적점검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상응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계획 수립 절차를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자체의 보완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부록 2 과제별 평가의견 참조)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은 과제가 시행계획에 과제로 선정되어 있거나, 관리과제의 단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실적을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현재의 시행계획에는 각각 고유과제 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통합 가능한 관리과제도 있음
- 시행계획의 관리에 부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거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지표를 사용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 관점에서 시행계획에 적합한 성과지표는 결과지표 보다는 산출지표 또는 과정지표가 적합한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결과지표를 사용

○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과제 중 일부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등 평가대상 과제 관리에 허점이 존재함

- 「2016년도 사회보장시행계획」에는 존재하나 평가 시에는 삭제된 과제 수는 총 5개 [2-29: 건강보험 재정지출 모니터링(복지부), 4-4: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복지부), 4-29: 공용이용시설 조성 확대(농식품부), 5-18: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리턴 아카데미(고용부), 6-3: 현행 복지사업 연계 조정 방안 마련(복지부)]
- 3개의 과제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에서는 1개의 과제로 평가받은 과제: 대학교육비 부담완화 과제(2-31: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32: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2-33: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부담 경감)

□ 시행계획 수립의 합리화

○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상응하여 5년 중기계획에 근거한 단년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체계화하여,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5년 동안 추진할 각 과제별 세부 로드맵을 작성토록 하고, 매년 로드맵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차 연도 시행계획에는 각 과제별 5년간 로드맵과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제시하게 하고, 2차 연도부터는 각 연도 시행계획만을 제출하도록 함
- 중기계획과 시행계획서 제출 전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관리 설계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의견서를 같이 제출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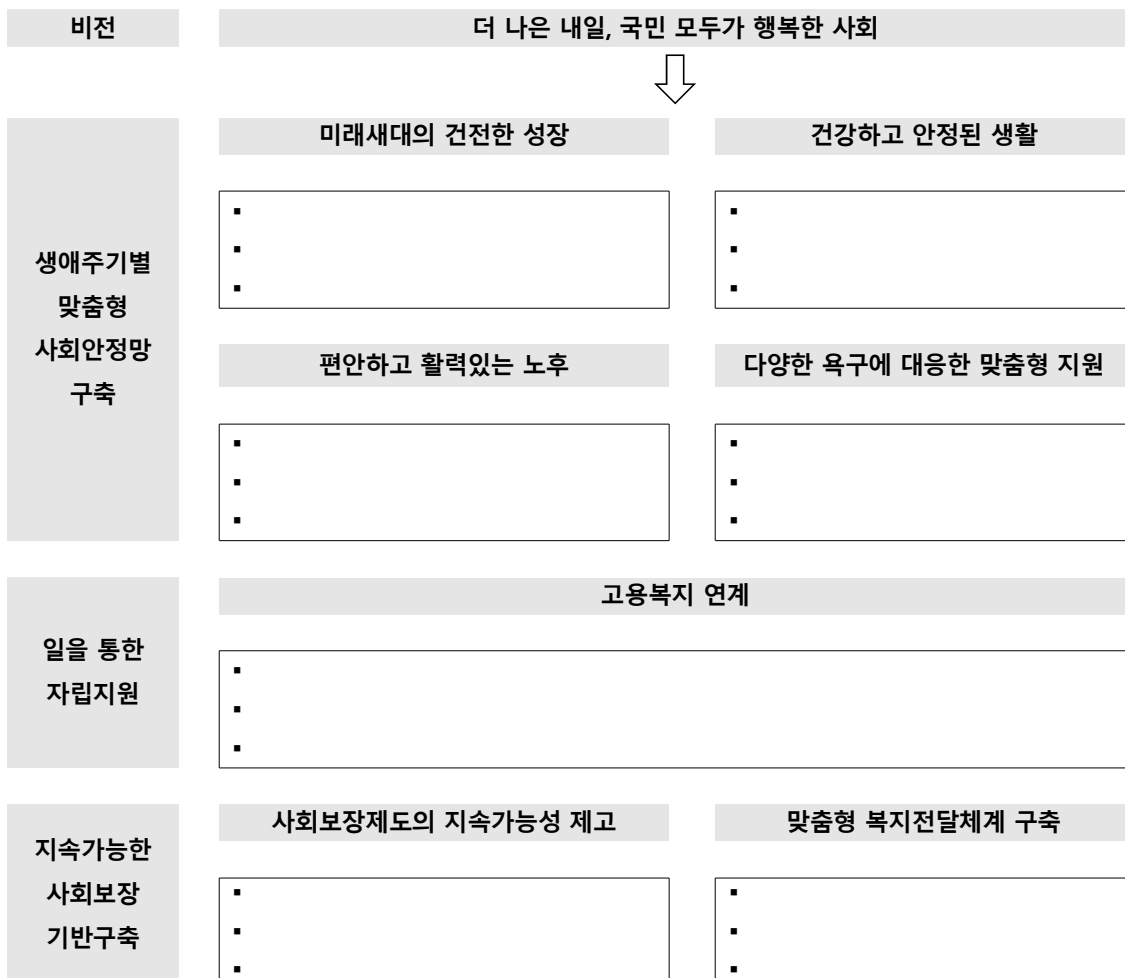
○ 단년도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합리화로 시행계획의 내실화

- 단년도 시행계획의 실적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목표체계의 수립과 이에 따른 과제의 선정이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거나 부합도가 떨어지는 과제를 선정한 경우, 시행계획의 실적 점검의 의미가 매우 떨어짐
- 따라서, 비전과 정책목표(1차 기본계획 기준 3개) 및 세부 정책분야(19개)가 선정

되고, 부처에서 각 정책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제시된 과제를 모아 정책분야별 과제군을 최종 확정할 때, 목표체계에 적합한 과제로 구성 여부, 제시된 과제를 통한 정책분야와 세부 정책분야의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의 비전과 이에 상응하는 기본틀이 [그림 4-1] 과 같이 완성되고, 각 정책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할 때, 각 세부 분야별로 과제가 정책목표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 때, 적합성 판정은 부처가 세부정책 분야별 과제를 추천할 때 과제의 부합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판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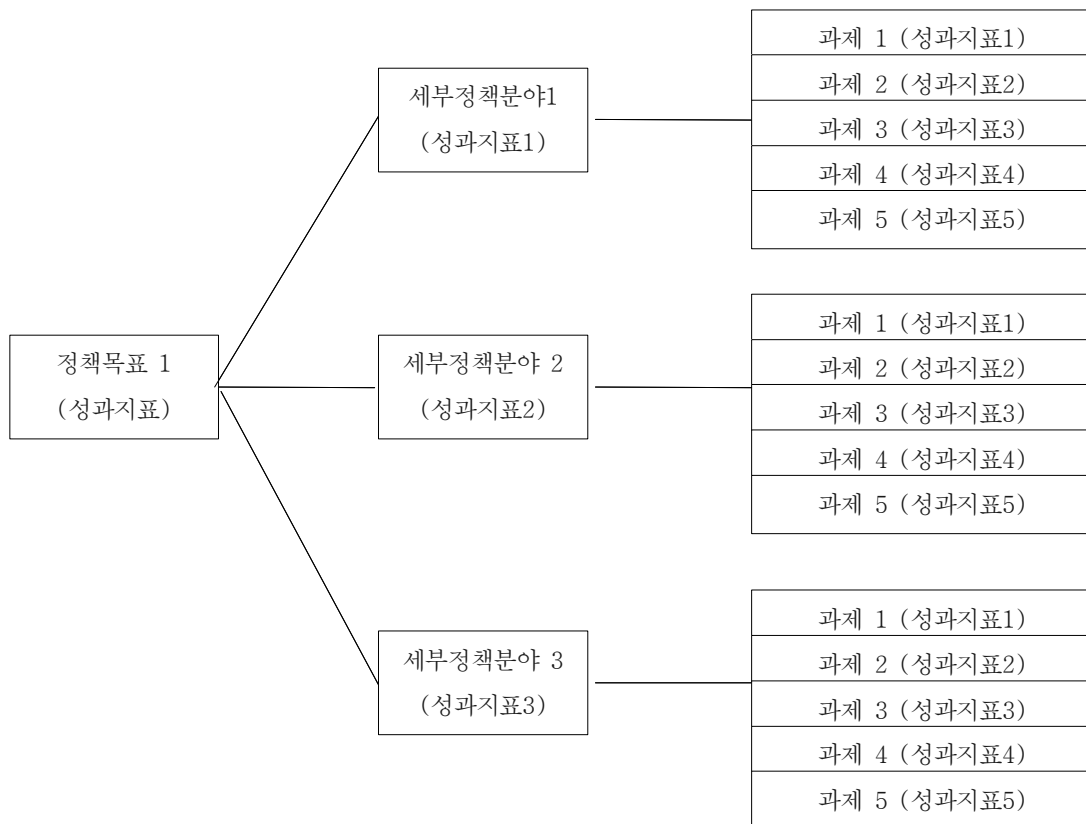
[그림 4-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틀



○ 부처의 입증자료는 정책목표 및 세부목표별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모습'에 제시된 주요 지표는 정책목표와 전체 세부정책 분야별로 지표를 체계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가능하면 정책 목표별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그림 4-2] 참조).
- 지금까지는 과제 단위의 성과지표만이 설정되고 있어, 정책목표-세부정책분야별 과제의 적절성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정한 과제의 선정 후에도 한 정책분야의 여러 과제를 통해 달성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곤란
- 그러나, [그림 4-2] 와 같이 상위목표체계(정책목표·정책분야)별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경우 각 분야에 속하는 과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별 과제 군의 성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4-2]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체계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들의 종합적 성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성과지표체계의 개발과 이들 지표를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15년도 시행계획 실적평가 시 병행한 중간점검용 평가지표를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5년 중간점검에서는 51개 정책분야별로 정책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1~3개의 지표를 발굴하고 총 81개 지표를 선정하여 점검)

○ 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작성지침」 과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지침」 을 참고

□ 시행계획 변경절차의 공식화 및 구체화

○ 시행계획이 수립된 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함

- 시행계획은 중기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작성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계획이므로, 시행계획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취지에 어긋남
- 시행계획의 변경절차를 공식화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의 변경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변경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처별 담당부서 → 변경 승인 요청(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자체 심의 또는 실무위원회 심의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통보 → 시행계획 평가대상 조정 및 확정
- 단년도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와 변경 시 처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매년 시행계획 수립 지침 시달시 관련사항을 같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의 종결,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 내용(제목, 사업내용 등)의 변경, 시행계획서 상의 과제의 분리 또는 통합, 신규과제의 등록, 예산의 증감, 성과지표의 변경 등
-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시달되면 시행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이를 별도의 양식에 정책목표-정책분야-과제명(과제번호), 변경 사유,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 후(**)로 표기하여 제출토록 함

[그림 4-3] 시행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양식

시행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서	
소관부처(부서명, 담당자):	
변경대상: 0000 시행계획서	
정책목표:	
정책분야:	
과제명:	
변경 내용:	
o 변경 전:	
o 변경 후:	
변경사유:	
제출일:	
제출자:	

나. 시행계획 평가 개선 방향

- 평가의 기초는 충실한 평가자료의 확보이므로, 질 높은 평가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난 3차례 수행된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내용의 불충분’, ‘표기 오류’,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평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평가 자체도 부실하게 될 위험이 상존했음
 - 또한,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중기적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림 4-2] 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는 이를 측정하기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별도로 기본평가나 핵심평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사무국 평가과는 중기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수집·축적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중기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필요
 - 시행계획의 실적평가는 자체평가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하므로, 질 높고 평가에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체평가에 활용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라.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참조)

- 또한, 평가 세부지침 활용을 통해 자체평가자가 평가에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떤 중점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자체 평가자료 준비에 도움이 됨 (부록 1. 세부평가기준 참조)
- 다만, 상위목표(정책목표 및 세부정책분야)별 성과지표의 측정을 위한 관련 자료는 부처에 평가계획 공지 시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적합하도록 평가 항목과 기준(초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는 ① 사업수행(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② 추진과정, ③ 성과(연차별 계획 실천에 적합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여부,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④ 전년도 또는 타 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 실적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필요
- 현재 측정기준에서 '1-1.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은 기본계획-중기계획-연차별 계획과 당해 연도 사업내용의 적합성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
 - 수립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매년 이에 부합한 과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1-2.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1-3.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2-1. 추진일정의 적절성', '2-2. 사업관리의 적정성', '2-3. 예산집행 실적' 등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측정기준은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존의 가용자료(성과보고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6년 평가결과 평가부문 '추진과정'의 경우, 전년도 대비 그 평가실적 향상이 가장 미미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사업성과와 관련한 점검에서는 성과지표 설정과 산정 부분을 보완할 필요
 - 성과지표는 매년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성과지표를 활용(반드시 산출이나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필요 없음)
 - 매년 다르게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과제의 중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와 상위목표의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과 목표치의 산정 및 산식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리 과제의 내용에 2개 이상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성과지표의 수도 이에 상응하여 조정하거나(관리과제의 세부 내용에 사업이 2개 있을 때, 성과지표의 수도 2개로 설정), 관련 사업을 포괄한 대표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적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실적 점검 필요

- 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의 의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과제가 추진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관련과제의 지적사항(감사원, 국회, 각종 위원회 평가, 통합재정사업 평가, 성과보고서 등)을 보완하여 원 안대로 추진토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과제가 수행되는 기간에 외부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과제 수행상의 애로점(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사항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과제별 평가 이외에 실적 관리 필요

○ 복수 부처 추진과제 관리 방안 마련

- 2016년도 시행계획에서 복수의 부처가 동시에 수행한 과제는 과제번호 기준으로 총 17개(세부과제 기준 35개)이었음
- 특히, 이들 복수부처가 관여하는 과제들의 종합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당시부터 종합 평가 요소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두어 평가

○ <표 4-2>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체계에서 정책목표와 세부정책 분야의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수집하여 상위 목표 차원에서의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상위목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위목표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8년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의 최종 연도이므로 제1차 기본계획 추진의 최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의 개발 등 준비가 요구됨

다.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활용을 체계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은 평가점수를 등급별로 나누어 단순히 제시하는 식의 기술통계와 사업의 성과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계획 대비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과제 수행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평가결과 제시방법은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데 적합하지 못하며, 평가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평가보고서 내용 구성, 평가보고서 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기본적으로 2016년도 실적 평가 개요, 2016년도 평가결과 종합, 2016년도 시행계획 주요 실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로 구성 (본 보고서의 <표 3-1> 참고)
- 평가결과 공개(내용 범위와 시기, 방법 등)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평가과의 평가정책의 방향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 전문공개 시 평가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반응이 예상되므로, 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 대상기관과 이해관계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 추후의 평가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평가제도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정보의 완전공개가 반드시 최적이 아니므로, 과잉·과소 정보를 지양하는 가운데 적정 정보수준을 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평가제도 운영초기에 대외공개는 '요약본'의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은 총평 부분, 그리고 정책목표별 평균점수 및 과제의 평가등급 분포 등을 포함시켜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동시에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제도가 정착되면서 정보수요자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여, 정보 수요자별로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방법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인인 경우, 홈페이지에 요약본과 시행계획 정책분야별 대표지표의 실적치를 제시하는 방법, 전문가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요청절차를 만들고 이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의 세부 분석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라.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통해 소관 부서의 자체 실적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모색이 시급
- 현재 공공부문의 평가는 소관 업무부서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는 이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임
 - 충분한 평가자료 수집 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평가기준의 올바른 적용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 전문가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평가점수 수준과 평가등급의 분포에서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높음(표 4-1, 4-2 참조)

- 이는 자체평가를 기초로 한 평가제도 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와는 괴리가 있으므로, 평가 체계에서 자체평가의 의미가 거의 없는 상태임

<표 4-1> 2차 평가와 자체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과제 수 및 비중 비교

(단위: 개, %)

평가등급	2차 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74 (36.6%)	183 (90.6%)
우수	92 (45.5%)	16 (7.9%)
보통	30 (14.9%)	3 (1.5%)
미흡	6 (3.0%)	0 (0.0%)
전체	202 (100.0%)	202 (1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평가등급별 과제 수가 총 과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4-2> 2차 평가와 자체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과제 수 및 비중 비교(정책목표 기준)

(단위: 개, %)

평가등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차평가	자체평가	2차평가	자체평가	2차평가	자체평가
매우우수	55 (37.9%)	132 (91.0%)	13 (35.1%)	33 (89.2%)	6 (30.0%)	18 (90%)
우수	59 (40.7%)	11 (7.6%)	21 (56.8%)	4 (10.8%)	12 (60.0%)	1 (5%)
보통	25 (17.2%)	2 (1.4%)	3 (8.1%)	—	2 (10.0%)	1 (5%)
미흡	6 (4.2%)	—	—	—	—	—
매우미흡	—	—	—	—	—	—
계	145		37		20	

※ 괄호 안의 수치는 평가등급별 과제 수가 총 과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관대한 평가, 평가기준 적용의 오용, 평가자료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자체평가의 내실화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 가능함

- (자체평가 기준 마련) 명확하고 엄격한 자체평가 기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과제별 소관부서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은 (I) 평가추진 개요, (II) 평가세부 실시계획, (III)

향후 추진계획과 붙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붙임 1 ‘작성·평가 및 제출방법’에 간략히 기술되어 있음

-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문 (II) 평가세부 실시계획에 ‘각 부처 자체평가’ 란을 만들어 관련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시행계획 실적평가에서 자체평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침 참조)
- 부처 자체평가 란에 포함될 내용은 자체 평가자 선정 및 구성방법, 과제별 평가지표(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제시), 자체평가 점검 방법 등
 - 자체평가자 선정 및 구성: 자체평가 수행 시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하도록 함
 - 과제별 평가지표: 평가계획서 상의 ‘평가기준’을 자체평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세부 평가지침을 제시
 - 자체평가 점검방법: 자체평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점검되고 그 점검결과가 평가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
 - 기타 시행계획 실적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Q&A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
- (점검1) 과제별 소관부서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무국 평가과는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
 - 또한, 우수 자체평가 보고서(실적 포함), 미흡 보고서 선정 공표, 자체평가보고서 공개(평가의견 포함)
- (점검2)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당해연도 시행계획 평가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는 소관 업무부서가 관련 과제 수행 1년 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관리과정의 최종단계임. 따라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과정은 과제 ‘추진과정’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음
 - 자체평가 역량에 대한 판단을 통해 ‘2-2(사업관리의 적정성, 현재 5점 배점) 평가부문’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나. 시행계획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양질의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계획 통보 시 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교육) 각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 앞서 소관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명확한 자체평가 지침을 제시
 - 매년 자체평가를 통해 소관 부서의 과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본 취지에 맞게 과제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내용은 평가자료의 수집, 평가기준의 의미와 정확한 적용,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등임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평가과에 자체평가 'Help Desk'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실시

3. 평가제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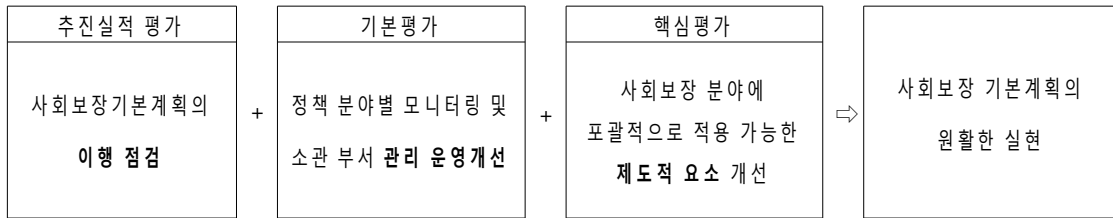
가.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제도 개선 방안

-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정책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
 - 현재 시행계획 평가, 기본평가, 핵심평가의 3가지 유형의 평가를 시행 중이나, 기획재정부, 타 위원회 평가와의 차별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 시 다수의 사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평가를 할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평가 수행에 있어 평가중복에 따른 피평가기관의 저항이 클 수 있으며 평가의 실익도 사실상 적음
 - 단년도 1회의 평가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나,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은 대다수 과제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 속성이 강하여 실효성이 적음
- 추진실적 평가, 기본평가, 핵심평가 등 각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평가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실적 시행계획 평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에 상응한 구체적인 실행여부와 그 성과 점검에 그 목적이 있음(앞의 개선방안 참고)
 - (기본평가) 사회보장 정책 분야별 모니터링의 성격을 강화하되, 직접 사업 및 제도의 평가보다는 (i) 정책 분야별 대표 지표 선정을 통한 평가, (ii) 메타분석과 전문가 의견(FGI)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부처의 조치상태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강화
 - 사회보장 정책분야별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과에서 지표 관련 데이터를 관리
 - 이 과정을 통해 사업 단위 또는 사업 군 단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가능해지며, 평가결과는 연속성을 지니게 되어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공식적 기록 축적의 의미를 가지게 됨(추후 사회보장백서 작성, 각종 연구에 활용 가능)
 - (핵심평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기본평가 결과 종합, 또는 현안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되, 사업 또는 개별 정책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정책/사업/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핵심 요소 등을 파악하여, 그 요소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다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각 사회보장 분야별 정책효과의 측정 및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기제의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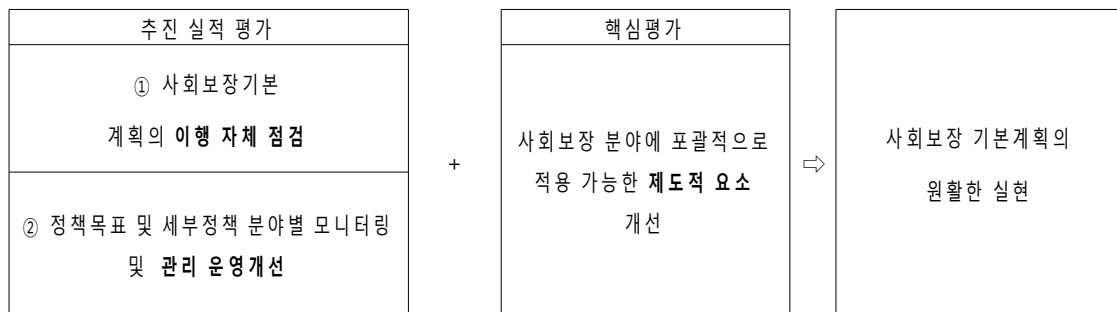
[그림 4-4]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1



□ 중기적으로는 시행계획 실적평가와 기본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실적평가는 현행의 개별과제 중심의 평가에서 정책 사업군 또는 다부처 사업군을 대상으로 그 실적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서 개별 사업(과제)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평가과는 상위 목표와 사업군의 성과지표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림 4-5] 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2



○ <표 4-2>에서 제시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보장 정책영역과 목표를 망라하는 성과지표 지도(Performance indicator map)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업군 단위의 기본평가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지도는 성과목표체계를 기초로 한 성과지표와 더불어 사업군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군별 지표는 '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용역과제로 수행한 「사회보장정책의 평가

의 방향과 과제(2015)」에서 제시된 공통지표안(p. 73~114)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애 주기별, 또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영역별(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고용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등)로 대표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을 파악·점검함

나. 사회보장 시행계획 실적평가 제도와 타 법정평가와의 관계 재정립 방안

□ 사회보장 분야 법정 평가 현황

- 현재 사회보장 분야는 총 7개의 기본계획에 따라 6개의 성과평가제도가 법정평가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
 -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도 매년 실시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 －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별법에 근거한 실적평가가 병행되고 있음
 - － 이러한 중복현상은 사회보장 분야의 각종 법정평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와도 사업이나 과제 단위에서 중복이 되고 있음

〈표 4-3〉 사회보장 분야 평가제도 현황

구분	법적 근거	주관 부처	평가 대상	기본 계획차수	평가 목적	평가 방법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회 보장 기본법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 사무국)	중앙 부처	제1차 기본계획 ('14~'18)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적인 관리운영 및 내실화에 기여	－ 사업개요(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체계·내용의 적정성), 추진과정(추진 일정·사업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실적), 성과 달성도(성과지표 적절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목표달성도)로 평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보건 복지부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제3차 기본계획 ('16~'20)	시행계획의 기본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전환에 대응하는 사회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만 평가 '16년부터 심층평가(회귀분석·심층면접 등) 실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계획	사회 보장 급여법	보건 복지부	지방 정부	지자체에 따라 4년 주기로	지자체가 수립한 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역사회 복지욕구와 복지	－ 시도와 시군구로 나누어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

구분	법적 근거	주관 부처	평가 대상	기본 계획차수	평가 목적	평가 방법
				별도 수립	환경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	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균형발전 노력 등 5개의 평가분야에 총 17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 복지법	보건 복지부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제1차 기본계획 ('15~'19)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평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아동 정책 기본계획 이행력 향상과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	- 기획 적절성(기본계획 부합성, 사업내용추진체계 적정성), 계획 집행도(예산집행률, 계획이행도), 성과달성도(성과지표 적정성, 목표치 적정성, 목표달성도)로 평가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 기본법	여성 가족부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제5차 기본계획 ('13~'17)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청소년 기본계획 이행력 향상과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성장 여건 개선에 기여	- 사업기획(기본계획 부합성, 사업내용추진체계 적정성), 사업집행(추진일정 적정성, 예산집행률), 성과달성도(성과지표 적정성, 목표달성률)로 평가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건강 가정 기본법	여성 가족부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제3차 기본계획 ('16~'20)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 간·세대간 조화를 실현하고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성과목표 달성률 등만 계약적으로 점검하는 정도로, 현재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예정 중)
공공 보건 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법	보건 복지부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제1차 기본계획 ('16~'20)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 마련	- '16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는 '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평가계획 마련 중

□ 법정 평가제도간 중복 문제

○ 현재 사회보장 분야에 여러 개의 법정평가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동일한 사업에 대해 중복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소관부서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동시에 평가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각각의 평가제도별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배점 등)이 미미하게 다른 가운데 동일 사업에 대해 상이한 평가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위험도 존재함

○ 법정평가간 평가대상 사업의 중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건강가정, 공공보건의료 등 5개 기본계획 평가와 중복되는 과제수는 총 81개로 40.1%의 중복률을 보임⁴⁾
- 사회보장기본계획 과제 총 202개 중 저출산고령사회에 포함된 과제 수는 51개, 아동

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각 계획 간 평가대상 사업의 단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1:1 비교는 곤란함

정책에 포함된 과제는 29개, 청소년정책에 포함된 과제는 7개, 건강가정에 포함된 과제는 24개, 공공보건의료에 포함된 과제는 10개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과제 중복률이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개 이상 타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총 27개로, 12개의 사업이 4개 기본계획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15개의 사업이 3개 기본계획의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4개의 평가를 받고 있는 12개 과제 중 10개는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평가를 받고 있는 15개 과제 중 9개는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이 3개 기본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간의 중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분야별 중복 과제 현황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92.9%)’,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80.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70.8%)’이 포함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정책분야에서 79%가 넘는 중복률을 보여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높은 중복률을 보임
 -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61.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55.6%)’,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54.5%)’,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50.0%)’ 분야에서 50%가 넘는 중복률을 보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분야가 다른 정책분야보다 높은 중복률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4-4〉 법정평가 중복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건강가정	공공보건의료
중복과제수	81	51	29	7	24	10
중복률	40.1	25.2	14.4	3.5	11.9	5.0

〈표 4-5〉 2개 이상 타 기본계획 중복사업 현황

구분	과제 수	과제명	중복 기본계획
3개 기본계획 중복	12개	1-3.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공공보건의료
		1-5. 난임부부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공공보건의료
		1-13.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1-14-2.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1-18.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1-1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구분	과제 수	과제명	중복 기본계획
		1-20.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1-40.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4-35-2.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5-13. 육아휴직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5-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5-15.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건강가정
2개 기본계획 중복	15개	1-2.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1-4.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1-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1-12. 양육수당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1-15.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1-1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아동정책, 건강가정
		1-25.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청소년정책
		1-28-2.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1-30.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2-2.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저출산고령사회, 공공보건의료
		3-15.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4-34-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4-3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5-9.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아동정책
		5-20.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건강가정
합계	27개		

〈표 4-6〉 정책분야별 중복과제 현황

(단위: 개, %)

정책목표	정책분야	과제 수	중복 과제 수	중복률 (%)
전 체		202	81	40.1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5)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48	38	79.2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10	8	80.0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4	13	92.9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24	17	70.8

정책목표	정책분야	과제 수	중복 과제 수	중복률 (%)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32	11	34.4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8	8	44.4
	－ 주거안정 대책 강화	7	2	28.6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7	1	14.3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21	7	33.3
	－ 노후소득 보장 강화	8	3	37.5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8	4	50.0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5	－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44	10	22.7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	－	－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13	－	－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15	2	13.3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13	8	61.5
2. 일을 통한 자립지원(37)	－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	11	6	54.5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9	5	55.6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6	2	33.3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11	1	9.1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20)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5	－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5	1	6.7

〈표 4-7〉 법정평가간 평가대상 중복 과제 현황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51개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불합리한 차별 제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	청년 채용형 인턴제 확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청년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해외취업 연계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NCS 개발 및 확산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산모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난임부부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완화 검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아동이 행복한 사회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기능 활성화	드림스타트 지원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확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 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제로 개편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제로 개편	보육료 지원 적정화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보육료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제로 개편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추진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자유학기제, 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마이스터고 확대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자유학기제, 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평생교육단과대학 운영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NCS 활용 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아빠의 달 특례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1인 1 국민연금 확립(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금·건강보험료 등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 지급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농지연금 보장 확대	농지연금 지급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제도 개선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포괄간호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주거복지안내 서비스 제공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노인안심생활 지원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예방 체계	노인자살예방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급성기 이후 노인의료지원체계 구축	호스피스 제도개선 추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새일센터 운영지원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확대	노인 취·창업활동 지원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중장년)	퇴직 후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지원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이해 교육 확대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29개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마련(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관리 방안 마련
		초·중·고 문화예술교육지원 (문체부)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배치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진로교육 제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지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	체육전담교사지정·운영
		임신·출산지원 강화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강화	난임부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지원 강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및 항목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 검진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및 흡연예방 사업 확대	금연정책 강화	학교 및 영·유아흡연예방사업
		정신건강 검사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실시	자살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
		인터넷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인터넷중독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설치
		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방치대책 수립, 교육, 전문기관 운영) 확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Wee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정성 확보	어린이 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실시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보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준비, 입양실무매뉴얼 개정, 입양정보 DB 구축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및 강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성 제고, 다문화 학생의 학습, 진로교육 및 자립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시간제보육 확충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반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지급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급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7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청소년 전용인프라 확대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확대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업제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지속적인 학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인터넷중독 청소년 발굴 및 치료 지원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인터넷중독 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치료 지원	중독관리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재발방지 제도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재발방지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가정 유·청소년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Wee 프로젝트 지원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24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생활안정지원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확대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자녀 교육지원 확대)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언어교재 보급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의 적응지원(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활성화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고용부)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 개편	양육수당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반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초등 방과 후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보육·돌봄 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및 품질관리 지원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 자격강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중심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 강화
			나눔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구분	개수	타 기본계획 과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중복 사업 내용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아빠의 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 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및 확대
		일하는 방식 개선 유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임신부 배려 제도 정착	육아휴직 제도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제1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10개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지역별 의료관련 통계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서비스 제공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 설치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및 적용 확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 단계적 개선
			중기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난임 가정,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고위험 산모 별도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문진료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현대화된 공공의료체계 구축	지방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

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기준으로 중복 사업의 예시를 정리한 것임

□ 법정 평가제도간 중복 해소 가능성과 방안

○ 개별 부처 입장에서 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각 위원회가 실적점검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과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달라 평가제도 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아동정책 분야에서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다른 기본계획보다 포괄적

이며, 타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인구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있음

- (아동정책기본계획) ‘행복한 아동’ 및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아동정책 비전에 상응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
- (사회보장기본계획)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에 상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아동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실적을 점검 중임
-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 과제를 구성하고 이에 상응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를 실현하고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아동에 대한 정책은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표 4-8〉 사회보장 분야 평가제도 현황

구분	비전	정책목표/핵심목표	정책분야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구분	비전	정책목표/핵심목표	정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1.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 확산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2.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후 소득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 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 조성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제1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1. 아동행복도 증진 2.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	[미래를 준비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역량강화 - 꿈과 기를 살리는 교육 실현 -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놀이 여가 권리 보장 [건강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안전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 안전확보 - 사회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 아동안전기반 구축 [함께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 차별 금지 원칙 실현 -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이 행복한 세 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1.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로 양성 2.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3.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구분	비전	정책목표/핵심목표	정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건강가정 기본계획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1.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2.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가족돌봄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가정의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가족친화적 직장사회 조성 -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제1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계획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	1.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 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 서비스 적정 공급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동정책과 관련된 정책분야

- 또한, 다른 법정평가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결과를 자체평가와 전문가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각각의 평가제도가 조금씩 상이한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평가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 중복 평가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선정을 각 계획에 잘 부합되게 선정하는 방법임

- 각각의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목표체계를 제시하여 각 부처가 각각의 정책 목표/과제, 세부 정책 분야별 과제 또는 사업을 선정할 때, 목표체계에 가장 잘 부합되는

사업 또는 과제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사업/과제가 중복해서 평가되는 경우를 최소화(앞의 시행계획 수립 부분 참조)

- 이때에도 과제/또는 사업이 명확한 단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의 사업 또는 과제가 여러 법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사업에서 보면 중복평가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중복은 아님.
- 동시에 각 연도 사회보장시행계획 수립 시 타 법정평가에서의 평가대상 여부를 과제별로 표시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차원에서 관리과제의 평가 중복현황을 파악하여 추후에 정책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다른 평가제도의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계획 발표 시 평가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복수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과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간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음
 - 해당 과제 및 사업에 대해 위원회간 평가결과의 공식적인 공유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중복평가의 해소방안은 각 개별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법정평가 간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현행대로 사업 평가를 병행하되, 중장기적으로 각 평가제도의 운영 추이(평가 운영 횟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업무 평가정책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정책 운영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주요 정책 영역별(사회보장, R&D, 저출산 고령화 등)로 법정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제도의 표준화, 평가제도간 조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시행계획 평가의 차별화 전략 및 정책제언

- 국민들의 복지요구 및 지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전 부처에 산재해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전적 방향의 모색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평가체계 및 제도의 확립이 중요해짐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년)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시행은 타기관 법정평가제도에 비해 3년차에 불과함
 - 향후, 차별화된 평가 방향성 확립과 평가체계 정비 및 구축을 통해 시행계획 평가의 독자적 정체성 확립과 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이 시급함

- 아울러, 일부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각 개별법상의 목적과 취지, 평가의 방향성이 상이하므로,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후 중복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행계획 평가 목적을 구체화·체계화하여 시행계획 평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됨⁵⁾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한다는 의미를 현재의 실적 점검 차원의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관리 기제로 발전시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함
 - 평가를 ‘성과관리’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성과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실적평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단순히 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보장 실무에서 성과 제고(실적/성과 집계 및 측정, 분석, 자문 등 커뮤니케이션, 운영관리, 성과개선)로 환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과 정책 분야의 성과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사회보장 평가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2 참고)
 - 사무국 평가과는 사회보장시행계획 상의 개별 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의 ‘시행계획 자체평가’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모니터링은 정책 목표별, 정책 분야별로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과 기존 지표의 보완이 요구됨
- 기존의 정량적 평가 이외에 정성적 평가제도(만족도·정책 효과성 조사 등) 도입 필요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대상자별,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검증 등 시행계획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
- 과제 소관부서가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관련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사무국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함
 -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사회보장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 왔으며,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에서 사회보장 분야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기제를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용역 또는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사업별, 정책분야별, 전달체계, 재정지원 방식, 평가방식 등)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성과관리의 모범사례(국내외)를 발굴하여,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소관부서에 전파

5) 현재 추진 중인 많은 법정평가제도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목적의 설정 없이, 단지 의무적인 평가로 수행함으로써, 평가가 단순한 실적점검 또는 형식적인 성과평가의 형태로 흐르는 경향이 커서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관련 연구용역 주제는 핵심평가의 주제로도 활용이 가능함. 현재 취약한 특정 분야의 성과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한편,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성과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보상제도는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현 시점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성과관리 수준에 상응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성과관리 우수자와 미흡자로 나누어 제도를 설계하되, 성과관리 우수자(자체평가 우수자)에게는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흡자에게는 제재나 평가등급 공개 보다는 실적 미흡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시토록 하여, 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 강신욱 외(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훈(2016).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점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2017).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합동(2014).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합동(2016).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관계부처 합동.
- 박해육 외(2015).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16).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2016년도 시행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